



5·18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 심포지움

‘5·18과 언론’

- 일시 : 2015년 5월16일 오후4시
- 장소 : 5·18기념재단 전시실
- 주최 :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5·18 기념재단  광주전남기자협회

식 순

1부

○ 국민의례

○ 기념사

- 김종배 자유언론실천재단 고문
-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 정남기 80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 구길용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

2부 : 사회 송 정 민 (전남대 명예교수)

○ 주제발표

- 1주제 : 5·18역사왜곡과 언론의 역할 (안종철 박사)
- 2주제 : 한국 언론과 민주주의 - 세월호 참사 발생후 1년 동안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 민언련 이사장 · 언론사회학 박사)

○ 토론

- 강 기 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 박 태 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 한 선 호남대학교 교수
- 조 기 선 전남CBS 보도국장
- 김 옥 렬 광주전남민언련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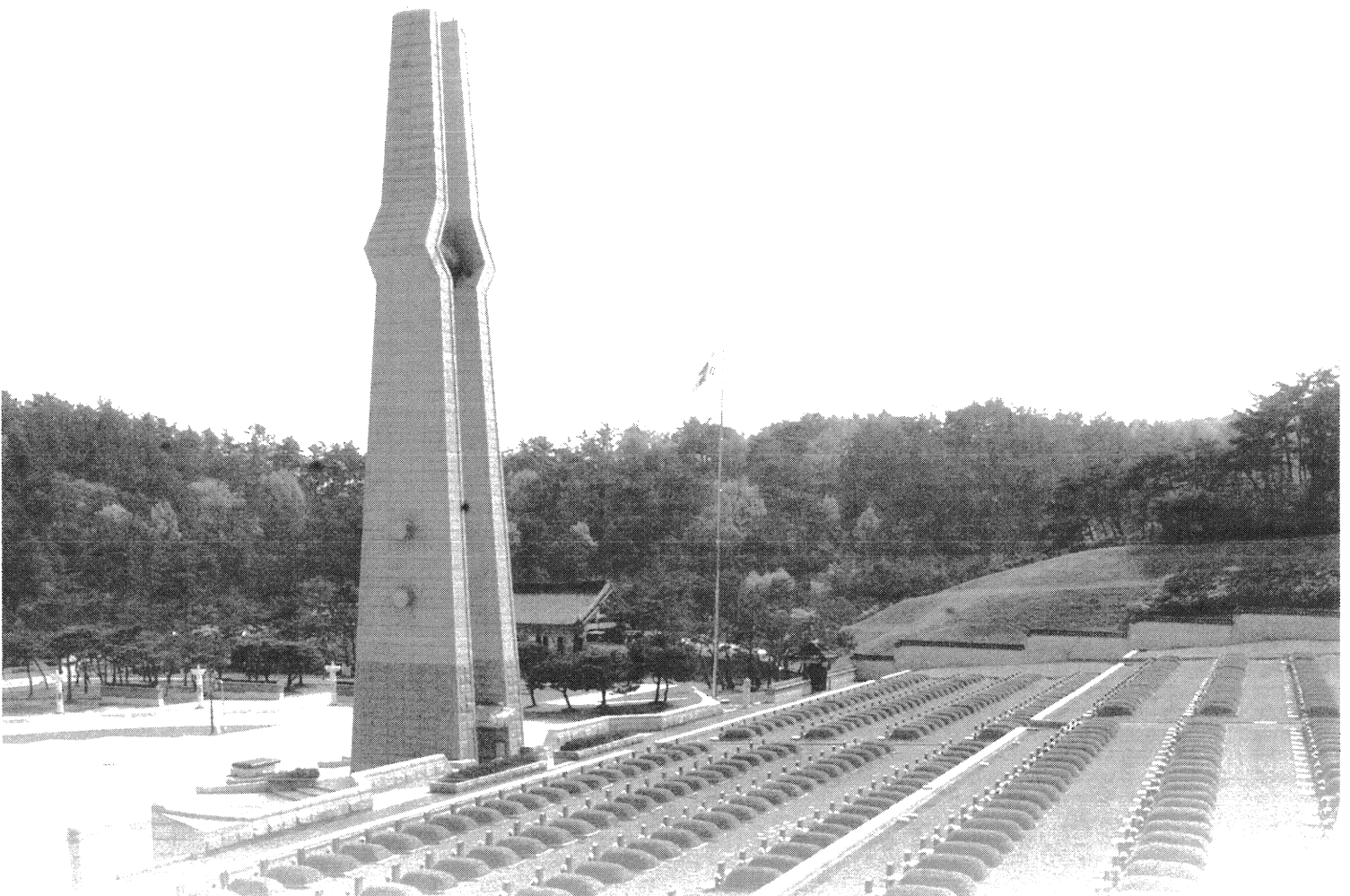
차 례

발제 1 : 5·18역사와왜곡과 언론의 역할	3
(안종철,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정치학 박사)	
발제 2 : 한국 언론과 민주주의-세월호 참사 발생후 1년 동안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19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 민언련 이사장 · 언론사회학 박사)	
토론 1 : 한국 언론의 구조적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53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토론 2 : 한국 언론과 민주주의 토론문 - 세월호 참사 발생후 1년 동안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57
(박태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토론 3 : 폭주하는 언론과 냉소하는 대중의 공모가 문제	63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토론 4 : 종편의 5·18역사 왜곡과 폄훼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원인	65
(조기선, 전남 CBS 보도제작국장)	
토론 5 :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언론, 미래는 없다	69
(김옥렬, 광주전남민언련 이사)	

1주제

5·18역사와곡과 언론의 역할

(안 종 철 박사)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왜곡과 언론의 역할

안종철<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정치학박사>

I. 5·18민주화운동의 발생 배경

1. 유신체제와 박정희의 사망

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단행하고 이어서 영구집권을 위해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학생과 시민 그리고 재야와 야당은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중과부적이었고 10월 유신을 통해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편했다. 곳곳에서 유신헌법의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박정희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했다.

유신체제가 막바지에 이르자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은 한계점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다. 극단적인 유신체제 속에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부마민주항쟁이 발발하였다. 16일과 17일에는 부산에서, 18일과 19일 그리고 20일 새벽에는 마산과 창원에서 본격적으로 분출하였다.

학생들이 중심되어 촉발시킨 부마민주항쟁은 시민이 주체가 된 대규모 항쟁으로 신속하게 확산되었다. 약 4일 동안의 부마민주항쟁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유신철폐! 독재타도!”였다. 이외에도“학원사수! 교련철폐!”등의 구호가 외쳐졌고, ‘애국가, 우리의 소원, 봉선화’등의 노래가 불리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18일 밤 0시를 기해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2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그리고 20일 정오를 기해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탱크로 무장한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10·26사건이 발발한 현장에서 차지철의 발언은 유신체제의 통치관을 잘 보여주는데, 이것이 신군부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25분경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특별시 궁정동에 소재한 밀실에서 열린 연회에서 가장 충직한 부하였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았다. 박 대통령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이 사건은 5·16군사반란을 통해 집권하고, 10월 유신을 선포함으로써 이른바‘유신시대’를 열어 총 19년 동안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다. 박 대통령이 사망하고, 유신체제



가 종말을 고하자, 극도로 억눌려왔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한국 사회 전반에서 분출될 조짐이 형성되어갔다.

2. 신군부의 등장과 민주화의 갈망

예기치 않았던 10·26사건은 권력의 공백을 가져왔다. 이 기회를 틈타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 군부 세력들이 이른바 '12.12사건'을 일으켰다. 이들은 군부 내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출신들로 박정희 정권 하에서 요직을 독점하던 군인들이었다. 12.12사건을 일으킨 신 군부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하여 실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봄이 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다. 유신체제에 항거하다 해직되었거나 제적되었던 교수와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학원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흐름이 형성되었고,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학생 자치기구들이 부활했다. 특히 4월이 되자, '학원민주화운동'이 전국의 대학들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유신체제 하에서 병영과 같이, 그리고 전횡과 독단으로 운영되고 있던 대학이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해 5월이 되자, 학생들은 신 군부의 정치 개입이 한국의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임을 확신하고, 정치 민주화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재야와 야당에서도 '민주화촉진 국민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정치민주화에 대한 주장들이 폭발했다.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자, 권력당국은 휴교조치 등의 조치로 협박하면서 임시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비상경계체제로 돌입하는 등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전국 23개 대학이 참여한 총학생회장단은 5월 10일 고려대에서 회의를 갖고, "비상계엄의 즉각 해제, 전두환·신현확 등 유신잔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두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산발적인 집회와 시위는 5월 13일을 기점으로 연합 시위로 바뀌었고, 5월 14일에는 서울지역 27개 대학 약 7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5월 15일 서울역 앞 광장과 도로에는 약 10만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당일 발표된 신현확 국무총리의 특별담화를 믿고 학교로 돌아가는 이른바 '서울역 회군'을 했다.

II. 5·18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1. 광주의 민주화 열기

전국의 민주화 열망에 발맞추어 광주와 전남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학생과 시민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학가와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에서 신군부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기원하는 집회와 시위를 개최했다. 시민들은 이때의 집회와 시위를 ‘민족. 민주화 성회’라고 불렀다.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학생과 시민은 “계엄을 철폐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쳤다.

광주 시민들은 주장과 견해를 충분히 알렸다고 생각하고, 정세에 맞춰 다음 행동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5월 19일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해산했다. 그러나 정부는 17일 24시를 기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엄령 이후 재야 정치인들의 연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연행과 구금 조치가 이루어졌고, 국회와 주요 대학, 정부 기관 그리고 언론 및 방송사 등에 계엄군이 배치되었다.

2. 계엄령의 발동과 5·18민주화운동의 발발

5월 18일 오전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전남대학교에 주둔하던 계엄군이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의 출입도 통제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봉쇄된 것을 모른 채 등교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계엄군에게 항의했다. 계엄군은 ‘즉시 귀가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킨다’는 경고방송을 하고,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계엄군은 진압봉을 휘두르면서 도망치는 학생들을 끝까지 추적해 구타하고 폭행했다. 계엄군에게 연행된 학생들의 일부는 어디론가 끌려갔고, 또 일부는 정문 앞에서 진압을 보여주는 시범 마루타가 되어 있었다. 일찍이 이런 광경을 보지 못했던 시민들은 계엄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항의하자, 계엄군은 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학생들은 계엄군의 만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심으로 진출했다.

3.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5월 18일 정오가 되자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도심에 출동하여 곳곳에 배치되었다. 계엄군은 시민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즉시 해산하라며 진압봉을 휘둘렀다. 계엄군의 진압봉은 경찰이 소지한 50cm의 진압봉과 달리 길이가 70cm였고, 쇠처럼 단단해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시민들이 속출했다.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에서는 이성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시위 참여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폭행과 연행을 일삼았다.

오후가 되면서 계엄군의 폭력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났다. 그러자 계엄군의 진압은 더욱 극단화 되었다. 시민들은 “비상계엄 해제하라!”, “휴교령을 철회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을 외치면서 몇 일전과 같이 전남도청 앞 광장과 분수대로 모여들었다. 밤



이 되자, 계엄군은 밤 9시 이후 왕래를 차단하는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시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시위가 확산되고 증폭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계엄군과 경찰은 광주지역 주요 장소 36개소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시민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시위의 발생을 예의주시했다.

4. 시민의 자율적 항거

계엄령이 내려졌지만, 아직은 대학교만 폐쇄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을 제외한 시민의 일상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5월 19일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은 시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 계엄군은 도심을 왕래하는 시민에게 공포스런 검문을 했고, 부모들은 자녀의 외출을 막았다. '충정작전'에 동원된 계엄군은 총과 검의 휴대는 물론, 화염방사기, 장갑차, 심지어 헬기까지 동원했다. 헬기는 시위대를 향해 '폭도', '불순분자' 등이라고 하면서 해산을 요구했다. 이러한 계엄군의 행위들이 오히려 시민들을 자극하여, 오후가 되자 시위대의 수가 더 늘어만 갔다.

5월 20일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휴교 조치가 내려졌다. 시외버스터미널(현 광주 롯데백화점 터)에서는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죽은 시신이 발견되었다. 금남로 카톨릭센터 앞에서는 계엄군이 30여 명의 연행 시민들을 속옷만 남긴 채 구타했다. 그리고 서방삼거리에서는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화염방사기를 사용했다.

이러한 계엄군의 행위들은 시민들의 적개심을 상승시켜 자연스럽게 시위에 동참하게 했다. 시민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유인물이 도시에 배포되기도 했다. 계엄군의 진압 방식은 오히려 시민들을 자극했고, 시민들은 '애국가'와 '아리랑'을 부르면서 계엄군에게 점점 격렬하게 항거했다. 운수업 종사자들도 이에 동참하여 무등경기장에서 200여 대의 택시를 앞세우고 전남도청을 향해 행진했고, 버스를 비롯해 대형 차량들이 합세했다. 한편 시민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상황들을 왜곡 보도하는 방송국을 불태웠으며, 극단적 진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도시에 위치한 노동청과 세무서를 파괴했다.

5. 계엄군의 집단 발포

계엄군의 첫 발포는 19일에 있었으나, 조직적인 성격을 띤 발포는 5월 20일 밤 광주역 앞에서 이루어졌다. 계엄군은 광주시를 봉쇄하는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고립된 항거를 의미했다. 계엄군의 발포가 보다 확산된 것은 21일 오후였다. 이 발포는 우연 혹은 방어적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살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광주의 병원들은 계엄군에 의한 구타와 칼 그리고 총격으로 인한 피해 환자들로 넘쳐났다.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부족한 혈액을 충당하려는 시민들의 긴 헌혈 대열이 등장했다.

계엄군의 총격 이후, 시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장의 필요성을 느꼈다. 시민들은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군용 차량을 끌고 나왔다. 그리고 총기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의

여러 곳으로 진출했다. 시민들은 전남지역을 누비면서 계엄군의 극단적인 진압에 대해 함께 항거할 것을 호소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 온 시민들은 전라남도의 각 지역민들과 연대하여 경찰서나 예비군본부 등에 보관되어 있던 무기들로 무장하는 한편, 광주로 무기를 이송했다. 그리하여 이른바‘시민군’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계엄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항거가 이루어졌다.

6. 자치공동체의 형성

계엄군은 5월 21일 5시 30분 총퇴각을 결정했다. 시민들이 계엄군의 퇴각을 확인한 시간은 밤 8시경이었다. 이로써 5월 27일 전남도청의 시민군이 계엄군에게 진압당할 때까지‘자치공동체’가 형성되었다.

5월 22일부터 시민들은 전남도청에서 자치결사체를 구성하고, 이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했다. 시민들은 도심을 정리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자유 발언대)를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설치했다. 「시민수습대책위원회」는 계엄군과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성과는 없었다. 국무총리가 사건의 수습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으나, 계엄군의 보고만을 받은 후‘광주는 치안 부재상태’라고 했고, 언론은 신 군부의 주장만을 보도하면서 광주와 전남을 폭도가 장악한 지역이라는 부정적 낙인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5월 23일 전남의 주위 지역과도 단절된 광주는‘질서 유지와 시내 청소’를 하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군들에게 줄 주먹밥을 만들고 빵과 음료수를 자발적으로 공급했다. 당일 밤부터 전남도청의 시민군들은 여러 가지 긴급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무기 반납’을 둘러싸고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5월 24일의 최대 논쟁점은 지난밤부터 시작된‘무기 반납’이었다. 계엄군은 무기를 무조건 반납할 것을 종용하고 협박했다. 이 문제를 두고 대치하던 자치결사체는 계엄군과 아무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무기 반납은 그 간의 희생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해갔다.

5월 25일 전남도청의 시민군과 자치결사체는 이 사건에 관한 신 군부와 계엄군의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시민결사체와 계엄군 사이의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고, 계엄군은 당일‘밤 12시까지 무장해제하라’고 통보했다. 이것은 상황의 호전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어 더 큰 비극으로 치달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는 시민결사체의 인식과 구성원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시민군은 언제 죽음을 맞을지 모르는 최후의 항거를 준비해야만했다.

7. 최후의 항쟁

5월 26일 오전 계엄군의 탱크가 도심으로 진입해왔다. 전남도청에 있던 김성용 신부를 비롯한 항쟁 지도부는 죽음을 무릅쓰고 탱크의 행진을 가로막고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 계엄군의 탱크는 일시적으로 기존의 대치선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 일은 광주 전체에 공포를 불



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시민군은 최후 항전을 다짐하게 했다.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 범시민 궤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시민들은 '80만 민주시민의 결의'를 함께 했고, 7개항의 결의를 채택했다. 자치결사체는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민주사회를 안겨주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투쟁합시다"라고 다짐했다. 오후 5시 계엄군은 진압 계획을 시민군에게 통보했다. 이제 시민군의 선택지는 '항쟁의 의의를 위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아서 항쟁의 의의를 계승할 것인가'뿐이었다. 시민군과 자치결사체는 최후의 항전을 치를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귀가 조치시켰다.

계엄군은 5월 27일 새벽 4시경 시민군과 자치결사체의 본부가 있던 그리고 최후 항전지였던 전남도청을 향해 몰려왔다. 이로부터 1시간 10분 만에 전남도청에서의 항전은 끝이 났다.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을 비롯해 많은 시민군들이 계엄군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이로서 장장 10여 일에 거친 5.18민주화운동은 종료되었다. 당시를 경험한 시민들은 계엄군이 진입하면서 내던 군화발 소리와 각종 진압장비들에서 발생한 굉음 그리고 총격전 소리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회상한다.

Ⅲ. 상흔의 치유와 항쟁의 역사화

1. 5·18진상규명운동

‘5월운동’은 계엄군이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을 진압하고, 구금 및 연행자들에 대한 신군부의 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5월운동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의 복원과 항쟁의 기념 등을 목적으로 전개되었던 사회운동 전반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는 과제로 선정된 것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5월운동은 해마다 5월에 절정을 이루었다. 5월운동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개시되면서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띠었으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을 비롯해 신군부와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이 전개되었던 1994년과 1995년을 즈음하여 거세게 다시 타올랐다.

2. 광주청문회

1988년 1월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자문기구격의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기구의 과제는 민주발전과 국민화합 및 사회개혁에 관한 실천 방안을 건의하는 것이었다. 이 기구의 조사와 제언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회피 또는 배제한 반면, 양비론에 기초해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건의안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쟁점과 요구를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하여 1988년 4월 26일 총선을 통해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은 12·12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다시금 정치·사회의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국회에서는 6월 27일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노태우 정부는 불리한 정국을 ‘광주피해자보상법’의 제정을 통해 돌파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연일 5·18민주화운동의 책임자 처벌과 5공화국의 비리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격돌은 11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즉 ‘광주청문회’의 개최로 귀결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11월 전두환의 사과 성명 발표와 백담사 은둔,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 발표와 12월 양심수의 석방 등의 유화책을 시도해 종결지으려 했다. 청문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정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압박 속에서 여야는 1989년 1월 국회의 특위 활동을 가능한 빨리 종결짓기 위한 의견을 모으기도 했으나, 2월 24일 노태우 정부의 중간평가 유보 방침이 발표되면서 청문회는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문익환 목사, 임수경, 문규현 신부 등의 연이은 방북사건과 공안정국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주요한 정치 의제에서 멀어져갔다. 광주청문회는 교착상태에 빠졌고, 여야는 밀실회담으로 정치적 출구를 찾았던 것이다. 결국 1989년 12월 15일 노태우와 3김 총재간의 정치권 대 야합에 이어 12월 31일 구체적 조치나 해결을 수반하지 않은 채 전두환의 증언을 끝으로 청문회 정국은 문을 닫았다.



3. 책임자 처벌 활동과 5·18특별법

1993년 5월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진상규명운동이 다시 활발해졌다. 그 배경에는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와 전남이라는 특정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과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 시효 만료(1995년 8월 15일)가 임박했다는 점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입장이 소극적이라는 것 등이 작용했다. 그리하여 1994년 3월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책임자 고소 고발사업,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념일 제정운동, 관련 자료와 증언수집 및 조사사업, 학술사업」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해 5월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공소시효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파악했다. 이들은 1994년 7월에 294명의 연서로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했다. 이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는「공소권 없음」을, 나머지 피고소인에게는「무혐의」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발표되자, 즉각 항의성명을 냈다. 검찰은 7월 18일에 우려했던 결론을 발표했다. 그러자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학생운동단체 등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법률적 대응을 했다.

책임자 처벌운동은 더욱 격화되었고, 마침내 1995년 10월 26일 「5·18학살자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이 운동을 주관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 농성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로 드러난 신 군부의 부정비리 청산도 함께 주장했다. 그리하여 12월 19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 군부 세력들이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4. 피해 현황과 보상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정부의 공식 대책은 1988년 4월 1일에 발표되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면서 구성되었던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견해를 따른 「광주사태 치유방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관련자의 피해 배.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1990년 7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당의 안이어서 이후 많은 갈등을 유발시켰다.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는 사건이 발발한지 33년이 흐른 현재에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피해 규모는 5·18민주화운동에 관련자의 수와 피해 실태 그리고 사건 직후 행정기관을 통해 수집된 물질적 피해 현황뿐이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에 대한 제6차 보상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므로 6차까지 피해보상 업무의 결과에서 확인되는 인적 피해는 당시 사망자 155명, 상이후 사망 110명, 행방불명 81명, 상이자 3,378명, 기타 910명 등 총 4,634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 신체에

상흔을 입은 사람들에 국한된 것일 뿐이고,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와 파생적 피해는 가늠마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추모 및 기념사업

5·18민주화운동으로 광주와 전남에는 수많은 역사와 기억의 터가 생성되었다. 이를 장소 및 공간의 의미와 관련지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18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던 또는 관련된 장소와 공간들이 있다. 광주는 옛 전남도청과 그 일대를 비롯해 주요 사건이 전개되었던 도심 전역이 해당되며, 전남은 시민군이 지지를 호소하고 자위적 차원에서 무기를 수집하기 이동했던 중서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러한 사건적 연원으로 인해, 광주에서는 1999년 이후 27개의 장소에, 전남에서는 1998년 이후 73개의 장소에 사적지 안내 표지석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었다.

둘째,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사를 넘나들던 고통을 기억하며, 의의를 기념하는 장소와 공간이다.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은 주로 망월묘역에 안장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복권되면서 망월묘역 등지에 안장된 희생자들과 유공자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역사화 하는 국립5·18민주묘지를 망월묘역 옆에 1997년에 새로 조성되었다. 아울러 1999년 4월에 5·18민주화운동에서 연행되어 구금 및 재판을 받았던 옛 상무대 영창과 법정 그리고 헌병대 막사가 위치하던 인근에 5·18자유공원이 완공되었다. 한편 계엄군의 지휘본부가 설치되었던 옛 상무대의 일부에 5·18기념공간이 조성되어, 1980년의 민주화 열기와 신 군부에 대한 항쟁의 계승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군들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과 그 일대의 공간은 1993년 국가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5·18민주화운동 또는 5월운동 희생자들의 동료와 주위 사람들이 건립한 조형물과 추모비 등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곳에 위치해 당시를 회상하고 계승하는 시설로 활용되어 있다.



IV. 세계 속의 5·18민주화운동

1. 5·18민주화운동의 세계 속의 위상

5·18민주화운동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3세계 국가에서도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항거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은 희생과 죽음으로 점철된 과거사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과 성과의 성찰적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과거청산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5월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과 인권 및 평화운동에 굳건한 디딤돌로, 인간된 삶의 지향을 지시해주는 나침반으로 인지되고 있다. 특히 5·18항쟁기간 80만 도시가 치안부재 상태였음에도 강도,강간,절도 한건 없었다는 것은 불가사의 한 일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많은 나라들에서의 민주화와 인권 및 평화운동을 자극하는 훌륭한 선례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계승과 기억을 매개로 여러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들 및 사회운동가 등과 교류를 확대시키고 있어 그 위상을 매년 새롭게 정립해나가는 중이다.

2.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한지 31년 만에 광주시민들의 명예가 국제사회에서 공인되었다. 그동안 광주시민들은 5·18의 정당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널리 알리고 호소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광주시민들만의 생각으로 그치고 말 때 그 울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에서 인정함으로써 아쉬움은 상당히 극복되었지만, 이것마저도 부인하면서 광주폭동, 북한군의 사주화 등으로 폄훼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아쉽기만 하다.

2009년 9월 5·18자료를 유네스코에 등재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지만 1980년대 군부독재의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의 인권문서,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의 사형선고문서, 필리핀의 라디오방송 테이프가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추진되었다. 등재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에서 부담하였다. 추진위원회는 김영진의원, 5.18기념재단 이사장, 5월단체 대표, 지역대학 총장들이 참여하였으며 광주시장과 종교계 원로들은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신청서 작성은 실무 책임자였던 안종철박사가 진행하였고 3개월만에 신청서 작성이 완성되자 자문위원들, 추진위원들의 검토가 있는 후 2010년 3월 말 유네스코 본부로 직접 제출하였다. 2011년 5월 25일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국제자문회의에서 의결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의 서명함으로써 드디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었다.

인류 역사에서 실패한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 대부분 망실되곤 했는데 광주는 신군부

세력의 흑독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자료를 보존하였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광주시민들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은 회복되었다. 특히 광주시는 민주·인권을 광주의 정체성으로 삼고 인권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등 광주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에 의해서 5·18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되었고, 다시 유엔의 대표 기구인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함으로써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확인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기록물은 광주 금남로 카톨릭센터를 활용한 “5·18아카이브”에 영구 보관된다. 이 아카이브에는 5·18관련 기록물이 보존되고 국민들에게 열람이 됨으로써 민주주의, 인권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육의 명소가 태어나게 된다. 또한 전문연구자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 평화 등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를 주제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인권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다.



V. 5·18민주화운동의 왜곡

1. 지만원 등의 왜곡 주장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집단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역사학도, 일간베스트(일베), 지만원 등이 주류로 활동하고 있다. 5·18관련단체(대표 신경진, 정수만)에서는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였으나 사법당국에서는 명예훼손의 대상을 개개인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간주하였고 이미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 평가가 완료되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내리고 말았다.

2년 전인 201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왜곡에 대한 언론에서의 보도가 시작되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 600여명이 광주에 와서 시민군으로 변장하여 시민들과 군인들을 총으로 쏘았다는 것이다. 2013년 5월 13일 TV조선은 탈북자 임천용을 출연시켜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해왔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다”, “5·18은 무장폭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내용을 1시간여에 걸쳐 방송하였다.

또 2013년 5월 15일 동아일보 계열사 채널A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탈북자 출신이라는 김명국(가명)을 출연시켜 “61,62,63 저격 17여단 등에서 뽑힌 50명의 북한군이 80년 5월 광주에 남파되어 광주시민과 군인에 반반씩 나뉘어 활동했다”고 말하고 “북한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종편방송의 이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정부당국에서는 명쾌한 답을 신속히 내놓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1980년 5월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출몰하여 광주항쟁을 일으키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월북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영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군 통수권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대한 국가적 조사는 1980년 사건 직후 계엄사 발표, 1985년 국방부 재조사, 1988년 국회청문회, 1995년의 검찰 및 국방부조사, 1996~97년의 5·18재판 등 다섯 차례가 있었고 2012년 국가정보원,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원회의 조사까지 합하면 여섯 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이 여섯 번의 조사 중 어디에서도 북한군이 대대 규모로 남한에 들어왔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표된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영토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부인하였지만 광주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게 하였다.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기록에는 가해자의 기록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기록, 제3자의 기록 등이 총 망라 되어있으나 지만원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은 1995~6년 검찰수사 당시 조작·왜곡·과장·날조된 거짓말만을 늘어놓은 공수부대 지휘관들의 진술내용만을 그대로 인용, 편집해 발간한 것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방대한 자료가 산적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은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공수부대 지휘관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수백 명의 증언과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만원은 피해자, 제3자의 증언과 자료는 무시하고 계엄군의 증언만 선택적으로 취하여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계엄군들의 주장은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허술하고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어서 5·18수사를 맡았던 당시의 수사관들조차 무시했던 내용들이다. 당시 공수부대 장교들이나 계엄사 관련자들이 군,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가 진술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판사들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사자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지만원은 “12·12와 5·18”이라는 4권의 도서를 압축하여 출판한 『솔로몬 앞에선 5·18』이라는 책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허구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특히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위선과 어처구니없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선적 내용이 그의 책 전면을 도배하고 있다.

가장 최근 2014년 11월 그는 12년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다시 내놓았다. 이것 역시 그전에 내놓았던 “수사기록 4권”, 『솔로몬 앞에선 5·18』에서 주장했던 부분을 다시 재론하는 수준이다.

5·18분석 최종보고서에서 지만원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천대받던 불만세력을 부나비로 이용하여 남남전쟁을 유발시켜 놓고 이를 남침전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벌인 고도의 이간작전이었다. 광주시민에 의한 독자적인 광주시민 시위는 없었다. 민주화운동도 없었다. 20~30만 명이 동원된 폭동과 살인과 방화가 있었지만 이를 지휘한 한국인은 없었다. 국가는 북한군 작전에 소모품으로 이용된 4,634명의 광주 부나비들에 초특급의 유공자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돈으로 학교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영상물을 만들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국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주고 있다. 국가는 북한이 써준 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썼다. 국가도 국민도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2. 왜곡에 대한 반론

□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는 주장

- ▶ 5·18 당시 현장에는 '북괴는 오판 말라'는 구호를 외치고 조금이라도 과격할 발언을 하는 시민이 있으면 사상적으로 의심하여 계엄당국에 수사 요청하는 등 5·18은 반공 민주화 운동임.
- ▶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1980년 사건 직후 계엄사 발표, 1985년 국방부 재조사, 1988년 국회청문회, 1995년의 검찰 및 국방부조사, 1996~97년의



5·18재판 등 다섯 차례가 있었고 2012년 국가정보원,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원회의 조사까지 합하면 여섯 번이나 있었으나, 그 어디에서도 북한군이 대대 규모로 남한에 들어왔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표된 적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국방부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부인(‘13.5.29.)하였음.

- ▶ 지만원의 주장은 1995~6년 검찰수사 시 공수부대 장교들이나 계엄사 관련자들이 군,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가 진술한 것으로 그 내용을 당시 수사관, 많은 학자와 판사들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사자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 5·18때 대학생은 없었고, 북한군만 있었다는 주장

- ▶ “5월 18일 새벽부터 대한민국의 땅에는 젊은이들을 거의 구경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만원의 주장 대로 대학운동권 학생 지도부들은 검거열풍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하로 숨기도 하고 도피하기도 했지만 지도부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학생들은 검거도 되지 않았고 검거 할 필요도 없었음. 17일 자정을 기해 선포된 계엄령 전국 확대 실시를 전후하여 전남대, 조선대를 포함, 광주시내 각 전문대 관공서 등에 계엄군이 진주했고, 이 과정에서 전남대에서 69명, 조선대에서 학생 43명이 연행되었음.
- ▶ 계엄군의 ‘수사기록’에도 국가안전기획부의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에도 5월 18일 오전 9시 30분 경 전남대 정문 앞 200~300여명에 대해서 “전남대 학생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지만원의 논리는 책가방 속에 들맹이를 가져와 던졌기 때문에 광주대학생이 아니고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해 어떤 자료로 찾아 볼 수 없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임.

□ 북한 특수군이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주장

- ▶ 시민군으로 가장한 북한 특수군 600명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1995년의 검찰수사결과 보고서와 1985년의 안기부자료를 참고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자료에는 시민군들이 간헐적으로 6회 정도접근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6백명이 6회에 걸쳐서 공격하였다는 것은 검찰수사결과 보고서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안기부자료에 3회 습격, 2회 교전으로만 표현되어 있음.
- ▶ 특히, 잘 훈련된 북한 특수군 600명이 수용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교도소를 공격했다면 계엄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것인데 계엄군(국군) 및 북한 특수군 사망자가 교도소 인근 전투에서 발생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음.
- ▶ 당시 광주교도소장이었던 한도희씨도 시민군이 1980년 당시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는 계엄사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며 당시 교도소에는 3공수여단 병력이 중무장하고 있어서 교도소 습격이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계엄군이 시 인근 지역으로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도로를 향해 무차별 발포한 것이라고 증언함.

□ 5·18사진첩, 북한과 공모해 발간했다는 주장

- ▶ 5·18 당시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배포한 컬러 주검 사진들이 광주시에 나돌면서 광주시민들이 분노해 촉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980년 당시에는 컬러사진도 희귀한 상황이었고 대부분은 흑백사진이었을 뿐 만 아니라, 현상 인화하는데 며칠씩 걸렸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어 배포하고 이것으로 시민들이 격앙돼 광주항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대상황과 결부해서 판단할 때 어불성설임.
- ▶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생생한 장면을 촬영한 이 사진들은 5·18이 계엄군의 탄압으로 종료된 후 7년이 지난 87년 5월 당시 광주가톨릭센터 2층 미술관에서 최초로 공개되어, 소문으로만 그리고 유언비어로만 들리던 당시 광주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진실에 접근하는 데 기여했음.

□ 복면한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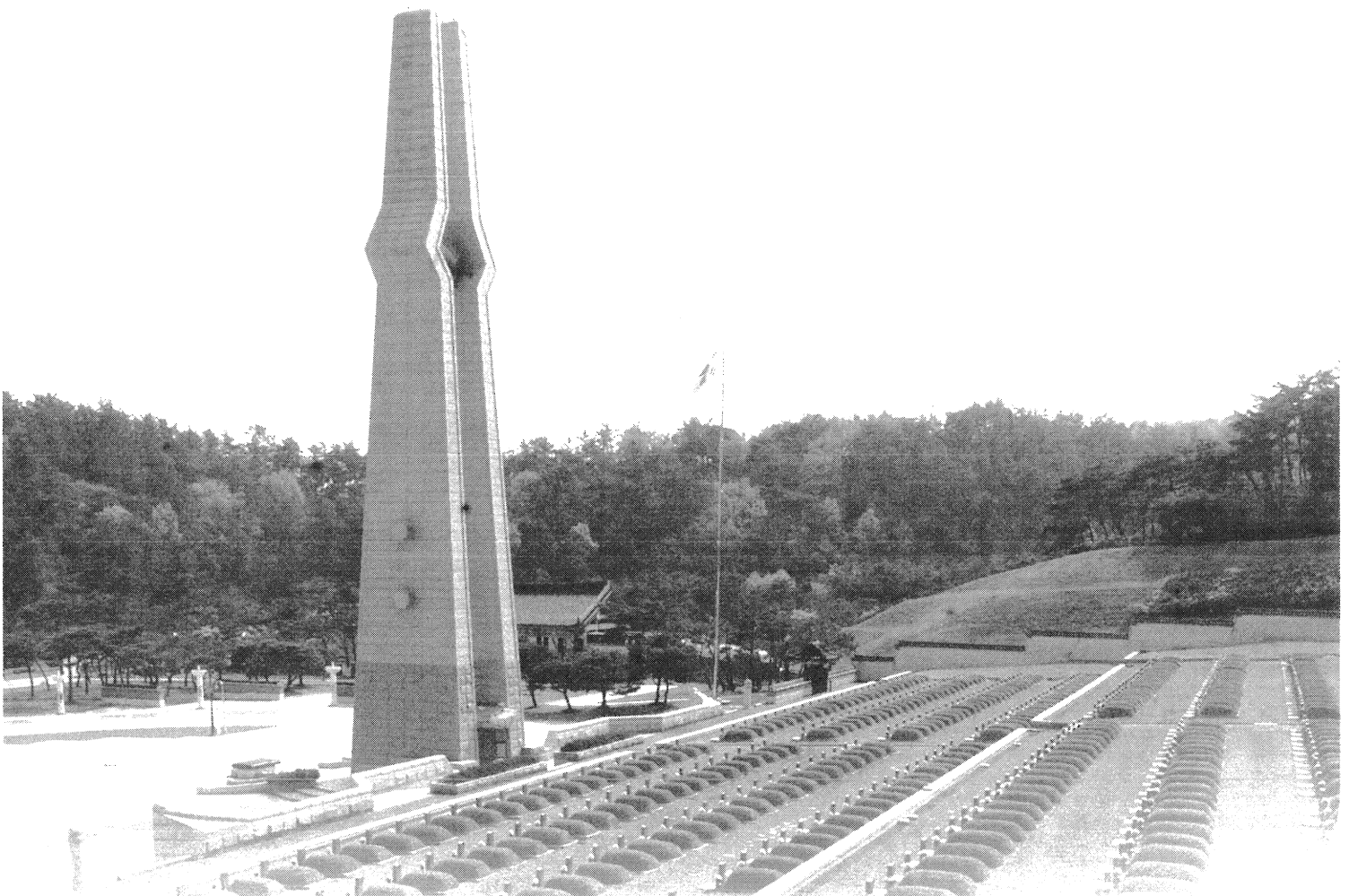
- ▶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있기 전까지는 마스크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집단발포 이후 시민들이 무장을 하면서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후에 피해를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피해의식에서 일시적으로 취한 행동임.
- ▶ 목포경찰서 수사 기록을 보면 유수연씨와 홍현식씨가 복면을 하다 체포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등 일부 시민들이 복면을 하고 민중항쟁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함. 다만, 당시 복면을 하면 그만큼 죄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조서에서 복면을 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많지 않았음.
- ▶ 또한, 무장한 시민군의 사진을 분석해 보면 얼굴을 가린 사람들보다 맨얼굴인 상태에서 무기를 든 시민군 사진이 훨씬 더 많이 있었고 무장한 시민군이라고 해박야 숫자가 적은데다 21일 오후부터 계엄군이 철수하자 곧바로 시민군이 자체적으로 무기 회수에 나섰다기 때문에 복면부대가 특수부대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3. 왜곡에 대응한 법개정 운동

한편 근본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국가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및 관련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국가유공자나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2주제

**한국 언론과 민주주의 -
세월호 참사 발생후 1년 동안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 민언련 이사장 · 언론사회학 박사)



한국 언론과 민주주의

- 세월호 참사 발생후 1년 동안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민언련 이사장, 언론사회학 박사>

목 차

1. 들어가며
2. 세월호 참사, '기레기 언론'과 민주주의의 후퇴
3. 기레기 언론의 역사적, 현재적 의미
4. 세월호 참사 관련 기레기 언론 보도 사례들
 - <사례 1> “탑승객 전원 구조” 오보 사태
 - <사례2 >지상파, ‘해경의 구조실패’ ‘정부책임’ 외면
 - <사례3> 본질 빚겨난 ‘유병언 괴물’ 만들기에 나타난 권언유착
 - <사례 4> 참사 1년 뒤 책임 문제와 관련자 재판 결과 등
 - <사례 5>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규탄한 보수언론 행태
 - <사례6 >TV조선 ‘세월호 민심 조작’보도
 - <사례 7> 세월호 특위 무력화시키는 정부행태 방관한 보수신문과 KBS
 - <사례 8>세월호 특조위원과 시민을 폭력적 좌파로 몬 조선일보
5. 기레기언론 보도에 대한 요인 분석
 - 1) 정치 체제 등 사회구조적 차원의 분석
 - 2) 대중매체 차원의 분석
 - 3) 언론인 가치관 등 개인적 차원의 분석
6. 결론에 대신해서



1. 들어가며

세월호 참사는 광주항쟁 이후 전 국민에 엄청난 충격을 준, 전 세계가 주목한 비극 가운데 하나로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의 3대 축인 정부, 자본, 언론 권력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특성을 지녔다. 이 참사는 무능한 정부와 탐욕스런 자본에 의해 자행된 사회적 타살의 성격을 지니면서 언론의 환경감시, 의제 설정 기능 등 제 4부의 역할이 대단히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 참사를 통해 건국 이래 구조화된 한국 사회의 특성, 즉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돈 벌이를 생명보다 우선시 하는 물질적 합리주의가 정부, 자본을 지배하고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교과서적 당위성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한국사회는 이 참사를 거치면서 분단 구조 속에 군부독재가 앞장섰던, 재벌에 온갖 특혜를 주는 경제성장정책이 말기적 증상을 나타내면서 정치, 경제 민주주의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목격하고 있다. 언론 또한 이 위기 상황에 경종을 울리거나 해법을 제시하는 독자적 사회 감시, 대안제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참사 발생 1년이 가까워오자 내놓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법률전문가들이 위헌·위법한 법이라고 질타할 만큼 합리성을 상실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모순의 타개보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고 대부분의 언론은 제동은커녕 정부의 확장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사회적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가 확정, 대통령 발표와 함께 시행하려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대통령은 위헌인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1년 전 오늘, 뒤집어 지는 배를 바라보며 온 국민은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 유가족들의 아픔과 온 국민의 상처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 뿐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위헌·위법한 시행령을 즉시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포함하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국한하지 않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참사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켜지지

못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인 594명은 지난 5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라는 제목의 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원안에 서명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아래와 같이 질타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겪은, 시대를 가르는 사건이다. 9명의 실종자, 295명의 희생자 가족들만의 사건이 아니다. 살아나온 게 죄스러워 숨죽여우는 생존자들만의 사건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경악하며 참담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사 1년이 되는 날, 대통령은 나라를 떠났고, 국민들만 이 나라에서 약속을 되새겼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참사의 고통을 덜어갈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행동했다. 그 결과가 4.16특별법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조사위 설립은 국민의 열망이고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는 특별조사위의 실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한 핵심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시행령을 고집하는 권력은 대한민국의 독소다.---



2. 세월호 참사, '기레기 언론'과 민주주의의 후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면서 각계 사회단체나 대안언론 등이 그 비극성을 절규하고 부조리 등을 고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교수, 법률가 6개 단체는 지난 4월 2일 이 참사와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썼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살릴 수 있었던 수백 명의 목숨이 덧없이 사라졌다. 정부의 무능과 개인의 탐욕 그리고 수많은 의혹들이 버무려낸 희대의 참극이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대참사를 계기로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명백히 달라져야 함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세월호 대참사 이전에 머물러 있다.---

언론비판 전문 매체인 미디어오늘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특집 기사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16일 사람보다는 돈을 싣고 항해하다가 바닷속으로 침몰해 버린 건 비단 세월호만이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언론의 무책임·선정성·편파·반인권 등 총체적 문제와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언론의 '양심'은 여전히 가라앉은 채 '보도 참사'는 되풀이되고 있다¹⁾.

--- 세월호 참사 때 기자들은 기레기로 불렸다. 언론은 '대형오보'를 냈다. 유가족을 배려하지 못한 선정적 취재가 줄을 이었다. 새로운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전해야 한다는 보도경쟁이 만든 결과다. 이는 참사 1년뒤인 2015년 4월 13일 방송기자연합회가 연 '재난방송보도를 위한 보도국 안에서의 실천과제' 토론회에서 쏟아져 나온 쓴 소리의 일부다²⁾.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취재했던 박영훈 목포MBC 기자는 참사 후 1년 동안 언론보도를 종합적으로 비판했다. "지금 언론은 세월호참사 첫날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세월호를 구하지 못하고 빙빙 도는 경비정의 모습처럼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채 빙빙돌고 있다." 그는 △참사 초기 오보 △정부 발표 받아쓰기 보도 △유병언 행적 쫓기식 보도 △세월호 피로감 호소 보도 △유가족 폄훼 보도 △시행령 논란 침묵 △인양에 부정적 여론형성 보도 △대대적인 배보상금 보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³⁾.

SNS 시대의 한국의 언론과 민주주의 현주소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문제를 드러냈고 특히 세월호 참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그 추한 모습이 확인되었다.

1) 미디어오늘 2015년 4월 15일

2) 미디어오늘 2015년 4월 13일

3) 미디어오늘 2015년 4월 13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와 유가족, 시민사회 등의 모습이 시시각각 SNS를 통해 전파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 대한 대중매체의 정보 전달은 매우 편파적이고 때로는 악의적이었다.

일부 TV 뉴스나 보수신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려 한다'느니 '특별법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되는 것은 법체계를 뒤흔다'는 식의 여당의 목소리만을 주로 전달할 뿐이었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만들고 민변과 많은 법학자들이 타당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특별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소유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수사의 주체가 되려는 것에 대해 들어 '가해자가 조사나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식의 문제제기도 나오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거대 정당이나 대부분의 언론매체도 거의 비슷한 목소리만을 낼 뿐이었다. 대통령이 유가족들에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중매체들은 외면했다.

유가족들이 청와대 주변에서 장기간 철야 농성을 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자 경찰이 차벽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측 눈치를 살피고 그 입장을 두둔하는데 열중하는 공식 매체들에게서 진지한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언론의 이런 모습은 여야 정당에 의해 집행되는 대의 민주주의가 수준이하인 것과 무관치 않았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기 전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등과의 대화는 공통적으로 생략하는 등 SNS 발달을 전제로 한 21세기 민주주의의 요체인 소통, 협치와는 너무 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에서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여야 야합으로 비판 받았으며 야당 대표가 청와대와 새누리당 대신 유가족을 설득하고 다니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여야는 간판만 다를 뿐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모습은 거의 유사해 분단시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극화시대를 타개할 정치적 역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었다. 새누리당 등의 집권층은 대중 심리전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한 여론 조작, 이른바 공작 정치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능력과 성과를 거두는 모습인데 반해 야권은 아직도 20세기 중반의 후진적 정치 공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진보적 정당이라고 하는 곳도 SNS 시대에 걸 맞는 정치에 대한 개념조차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4).

4) 정당의 대중 소통 방식의 하나인 당의 논평, 브리핑 등은 하루 발표 숫자가 얼마 안 되거나 부실한 내용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정보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킬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당의 기본 전략조차 확립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국기 문란 사건인데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면서 야권은 그에 대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논란을 계속 방치 또는 악화시키는 것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덮으려는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세월호 참사로 정국이 들끓으면서 청와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야권이나 시민운동 단체 모두 까맣게 잊어먹은 모습을 보였고 현재도 그런 상태다.

3. 기레기 언론의 역사적, 현재적 의미

7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한국의 대중매체 역사는 두 개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신문, 방송등 합법적 대중매체들이 독자와 시청자들과 만나는 제도언론 궤적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언론 안팎의 언론 자유 운동 또는 투쟁이다. 제도언론 내부의 투쟁은 제도언론이 보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도권 언론 학자들도 언론내부의 갈등을 한국 언론사에서 주요한 현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창간된 1988년 이후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등 거대 대안 언론매체가 출현한 것은 제도언론의 폐해가 자심했던 것을 반증한다.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언론악법으로 등장한 종편채널이 족벌언론과 자본의 결합체 성격을 띠고 그 영향력을 점차 강화해 나가는데 비해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방송언론 지형은 공정성, 공익성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대안언론을 포함한 양심적인 대중매체는 전체 언론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5% 내외이며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언론시장의 유통부분을 거대 포털이 장악하면서 신생 진보매체의 등장과 성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진정한 진보진영을 대변하면서 기존의 포털사이트에 필적할만한 대안매체가 창출되지 않는 한 수구, 보수 언론의 독과점 체제가 구조화되어 정치 및 경제 민주화가 뒷걸음질 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⁵⁾.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런 우울한 상황에 대한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이후 불거진 ‘기레기 언론’이란 신조어는 특히 이명박 정권이래 심화된 대중매체의 위상추락 속에서 등장했다. 정부와 거대 자본에 장악된 대중매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채 무기력, 무책임한 보도 행각을 벌이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그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기레기 언론은 박근혜 정권하에서의 공영방송 위상 추락을 고발하는 취지로 부각되었지만 참사 1년이 지나면서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 태도를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기레기 언론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속보경쟁을

5)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열악한 국민연금 체제를 방치한다는 의미로 복지의 하향 평준화를 의미하고, 정규직의 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것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외면해 전체 국민의 취업안정성에 역행하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허약하다. 박 정권의 정책이 출범이래, 모순된 내용을 동시에 내놓거나 말 따로 행동 따로 식의 기만적 성격이 강한 것도 언론의 감시 역할이 허약한 탓이다.



별이다가 '학생 338명 전원구조'라는 사상 최악의 오보를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KBS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정부 구조 발표를 앵무새처럼 되뇌는 식으로 되풀이 되었다. 또한 현장 구조 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참사 유가족 등이 폭로하면서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KBS 일부 기자들이 사내 망에 세월호 침몰이후 질타를 받는 '기레기 저널리즘'에 대해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의를 올렸다. 이후 K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1천 여명은 5월 29일 서울 여의도 KBS신관 앞에 모여서 '공동 파업 출정식'을 갖고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밝힌 <총파업 투쟁선언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⁶⁾.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비겁했습니다.

권력만 바라보며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외면했던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 우리는 애써 눈을 감고 모른 채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원망과 시청자들의 비난의 목소리에도 숨죽여 있던 우리를 일깨운 건 양심의 소리에 솔직하고자 했던 보도본부 막내기자들이었습니다.

막내 기자들의 반성문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는 더욱 참담한 현실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구조가 늦어지며 온 국민이 애를 태우고 있을 때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청와대로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길환영 사장이 직접 KBS 뉴스에서 해경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담한 KBS의 모습에 눈을 감고 있을 때 길환영 사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할 수도 없었고, 대통령 관련 뉴스는 9시 뉴스에 20분 내에 소화했고, 국정원 수사 아이템은 순서를 내리면서 공영방송 KBS 뉴스는 철저히 망가져 갔습니다.----

KBS 길환영 사장은 노조 파업 시작 일주일 뒤 이사회에서 해임된 첫 번째 언론사 사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물러났다. 당시 KBS 사태는 이명박 정권 이래 청와대가 낙하산 사장을 방송사로 내려 보내 방송사를 통제하던 방식이 KBS 구성원에 의해 급제동이 걸린 것을 의미했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하고 향후 권력으로부터 좀 더 좋은 자리를 보장받으려는 해바라기성 유사 언론인을 통한 권력의 방송사 장악 방식이 KBS 구성원들의 전면 반대로 좌초된 것이다.

6) 미디어라이슬 2014년 5월 30일.

언론 내부의 투쟁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는 경우는 흔치 않다. 70년대 중반이후 언론 자유를 외치던 많은 투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KBS 길환영 사장 해임은 언론 자유 투쟁이 성과를 거둔 성공 사례의 하나다. 75년 동아, 조선 투위의 자유언론쟁취 운동, 80년 5월 언론의 신군부에 대한 검열 거부 투쟁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크고 작은 언론사 내부의 투쟁이 전개되었지만 해직언론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투쟁 목표가 거의 달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KBS의 성공적 투쟁은 언론사 내부 구성원들이 단합했을 때 언론자유 공간 확대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KBS의 성공사례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해 7월 길 사장 후임으로 조대현 사장이 임명되면서 KBS는 다시 충실한 권력의 주구가 되었다는 비판이 지난 4월 10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 공동명의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7).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남의 일인 양 '세월호 피로감' 운운하며 이제 그만 끝내자 하고 공영방송 KBS는 여전히 기레기다.--- 조 사장 취임이후 KBS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축소-부실-왜곡보도로 대응하였다. 반면 돈을 앞세워 유가족의 진심을 호도하며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방해하는 정권홍보방송이 되었다. 겨우 마련된 반쪽 세월호 특별법마저 무력화 시키려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위원회 파행과 유가족의 참사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언론관련 단체는 지난 4월 15일 '1년 동안 언론은 세월호의 진실을 전혀 파고들지 않았다. 영원한 기레기가 된 우리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8).

--- 다시 그날, 4월 16일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국가는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고, 무능한 정권은 진상을 계속해 회피합니다. 경찰 공권력은 분노하는 여론을 무단으로 짓밟으며, 능멸하는 보수우익은 슬픔의 유가족들을 야수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죽음이 깊은 바다 속에 갇혀있고, 선체의 인양은 한참 요원하기만 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피해자 유가족들은 더 이상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걷고 외치고 쓰러지며, 그러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면의 벽은 더욱 강고해지지만 합니다. 무력(武力)으로 우리의 무력(無力)을 조장하려 듭니다.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단 하나 바뀐 게 없는 현실, 바꾸고자 하지 않는 권력, 바꿀 수 없는 체제에 지극한 한계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미디어라이슬 2015년 4월 10일

8) 미디어라이슬 2015년 4월 15일



기레기 체제도 일 년 동안 바뀌지 않은 재난의 현장입니다.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부끄럽다 외쳤습니다. 기레기가 되어서 미안했다고, 다시는 기레기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장을 찾고, 진실을 쫓으며, 진상을 밝히겠다는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영불 이후 우리가 본 것은 여전히 기만적인 기레기 짓이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뉴스와 보도, 해설, 아니 선전과 겁박의 수사들이었습니다.

1년 동안 언론매체는 세월호의 진실을 전혀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단 하나도 스스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정부기관의 정보만 유포하기에 바쁘고, 현장에 발사되는 경찰폭력을 축소보도하기에 분주하며, 분노하는 유가족과 절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공영방송의 카메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1년 전과 똑같습니다. 기레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체제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기에,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 기레기 언론매체입니다. 조중동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죽이는 여론조작의 짓만 계속해 왔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KBS, 현실을 왜곡하는 MBC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죽은 저널리즘, 추방된 저널리스트들의 자리에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형식적으로 1주기에 맞춰 생색내기에 바쁩니다.

세월호 그 재난의 현장에도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남에게 손 내민 의인들이 있었듯이, 기레기들 우리 속에서도 진상을 밝히고 진실을 추격하기 위해 저널리스트로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분투한 언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는 대한민국의 희망 찾기를 끝까지 할 것입니다. 언론자유를 회복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복구하며, 목 잘린 저널리스트들을 되찾아, 이 땅을 희망의 사회로 다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세월호 1주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시 결연히 약속합니다. 부끄러운 짓을 참회하면서, 또 다시 부끄럽게도 약속합니다. 기레기 신세를 청산하겠습니다. 기레기의 벽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기레기의 폭력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레기로 남으려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규탄하겠습니다. 기레기들이 판을 치는 이 저열한 언론판을 희망의 사회로 만들어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15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
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PD연합회---

4. 세월호 참사 관련 기레기 언론 보도 사례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보도, 즉 기레기 언론 보도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사례 1> “탑승객 전원 구조” 오보 사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사고 발생 2시간여 후인 오전 11시부터 11시 반까지 모든 언론이 속보 경쟁을 하며 “학생 338명 전원 구조” 오보를 쏟아냈다. 이는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오보사태였다⁹⁾.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사고 당일 경기도교육청이 YTN 보도를 근거로 11시 9분과 25분 두 차례에 걸쳐 38개 언론사에 ‘학생 전원구조’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언론사에서 이를 재차 보도해 오보가 확산·재생산됐다. 최종적으로 세월호는 476명이 탑승해 172명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객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은 실종됐다.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은 4월 24일 정부 당국의 발표를 확인도 하지 않고 ‘군 구조함 등이 대거 투입된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총력’이라는 기사를 내보내 참사 유가족 등이 항의하기도 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펴낸 보고서 <세월호 보도…저널리즘의 침몰>에서 “결론적으로 속보 경쟁에 휘말린 언론사들이 팩트 확인 과정 없이 받아쓰기식 보도경쟁에 나섰다”며 “역으로 관계부처 또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또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온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사례2 >지상파, ‘해경의 구조실패’ ‘정부책임’ 외면

세월호 참사 당시 지상파와 일부 언론이 정부와 해경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이 작성한 ‘세월호 참사 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본 문제적 재난보도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밝혀졌다¹⁰⁾.

보고서는 2014년 4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의 종이신문, 방송, 인터넷언론의 세월호 참사 보도를 분석한 결과 참사의 과정을 보도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JTBC는 해경과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은 반면 지상파는 관련 보도가 적었다. 동아일보는 참사의 원인을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한 기사가 1건에 불과했다.

9) 미디어오늘 2015년 4월 15일

10) 미디어오늘 2015년 4월 14일



참사의 원인을 '정책적 문제' 중 '대통령·청와대·정부부처'로 거론한 보도는 KBS 4건, MBC 1건, SBS 2건으로 8건을 보도한 JTBC가 지상파3사를 합친 것보다 보도 횟수가 많았다. TV조선은 MBC와 같이 1건, YTN은 1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상파방송은 '청해진 해운'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기사가 타 매체에 비해 많았다.

지상파는 '해난구조체계'의 문제를 TV조선보다도 적게 보도했다. 관련 보도는 KBS 11건, MBC 4건, SBS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JTBC(39건)가 지상파3사의 관련 보도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TV조선과 YTN도 각각 17건으로 지상파보다 관련 보도가 많았다.

매체별로 비교하면 신문은 세월호 참사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방송은 선원과 선장이나 청해진 해운을 주요원인이라고 진단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구팀은 "심층보도가 가능한 신문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심도 깊게 분석한 기사가 많았고. 현장감이나 영상이 강조되는 방송은 다소 자극적이거나 흥미로울 수 있는 장면을 담은 선장과 선원 혹은 청해진 해운에 더 주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례3> 본질 빚겨난 '유병언 괴물' 만들기에 나타난 권언유착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이 지난 4월 13일 발표한 '세월호 참사 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본 문제적 재난보도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TV조선의 '유병언과 구원파 수사' 보도는 214건에 달했다.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수사' 보도는 34건이고 '사고 후 결과 및 조치 보도' 항목에 해당하는 방송기사 중 유병언 관련 보도는 총 1296건 중 534건(41.2%)이나 됐다¹¹⁾.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유병언 수사에 착수한 4월 21일부터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의 추격전이 방송과 지면을 통해 펼쳐졌고, 정부 당국과 언론은 참사의 본질인양 이를 대대적으로 부각시켰다.

특히 지상파 방송 등은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거론하거나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유병언 보도에 치중했다. 무능한 정부와 탐욕스런 자본의 타살이라는 참극의 초점이 청해진 해운, 특히 유병언 일가에 집중되면서 이 참사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한 탐사보도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사례 4> 참사 1년 뒤 책임 문제와 관련자 재판 결과 등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참사 책임규명문제의 논란이 집중되고 정부가 약속한 국가대개혁도 실종 상태다. 수많은 문제점 가운데 정부 책임론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11) 미디어오늘 2015년 4월 15일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인양 문제도 참사 발생 1년이 다 되어서야 결정이 되었다.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인양 이후 조사를 한 뒤 재판을 하겠다는 판결이 나왔다.

플리뉴스는 지난 4월 12일 <진영정치에 갇혀버린 ‘세월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참사 책임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문제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그리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그리고 안이한 구조로 일관한 당시 해양경찰청, 그리고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 등에만 그치지 않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차원에서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선박연령 연장, 그리고 무분별한 선박개증축 허용 등 ‘사람’보다 ‘돈’을 중시한 한국사회의 책임까지 더해졌다.

무엇보다 4월 16일 당일과 이후 며칠 동안 드러난 해경과 정부의 무능함이 책임문제의 핵심이다. 구조할 수 있는 생명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핵심 요구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막혔고 지금까지도 세월호 유가족과 정권 간의 기나긴 대치가 발생한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

MBC 지난 4월 16일 <뉴스데스크>에서 두 번째 리포트로 <팽목항 찾은朴대통령 “세월호 인양 조속히 나서겠다”>를 배치했다. 뉴스는 “먼저 분향소를 찾아가 실종자 9명의 사진 속 얼굴을 일일이 바라봤고,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숙소도 살펴봤다”면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인 선체 인양을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 유병언家와 해경…책임자 처벌은?> 리포트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¹²⁾.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는 유 씨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와 재판이 더딥니다. 검찰은 유 씨 일가와 측근 41명을 기소했지만 대부분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27명이 풀려났습니다.

장남 대균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차남 혁기씨는 해외 도피중이고, 프랑스에서 체포된 장녀 섬나 씨는 송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찾아낸 유씨 일가 재산도 1천 3백억원가량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5천5백억원의 4분의 1도 안됩니다. 구조에 실패한 해경은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 정장만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해경과 공무원 30여 명도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으로 경감받았습니다”---

12) 미디어스 2015년 4월 17일



광주고등법원 형사5부는 지난 4월 28일 이준석 선장에 등 선원 1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¹³⁾.

재판부는 선장에게 인명구조에 대한 막대한 권한이 있는데도 선장의 역할을 포기하고 먼저 빠져나가 참사를 빚었다면서 퇴선 명령이 있었다며 살인죄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달리 이 선장의 퇴선 명령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해 선체 인양 후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혀 세월호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커졌다.

<사례 5>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규탄한 보수언론 행태

지난해 8월 세월호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을 때 참사 유가족 등이 정부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을 때 보수언론 등의 심각한 방목잡기가 시도되었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은 성명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통렬히 비판했다¹⁴⁾.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을 거부하고 나서자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공격을 퍼붓고 있다. 유가족들이 지나친 요구를 하며 국정을 발목잡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3자<與·野·유족> 협의체' 역시 대의민주주의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의 제안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 양 호도하는 보수언론의 보도는 터무니없는 왜곡이다. 유가족안은 대한변협 등 법률전문가들이 만든 법안이다. 전문가들은 유가족안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누차 확인한 바 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강조한다. 사실이 이런데도 보수언론들은 마치 생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유가족들을 끊임없이 매도하고 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유가족안이 왜 문제인지 사실에 근거해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언론은 합리적 반론을 펼치는 대신 국민을 편 가르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심지어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신공격성 보도까지 내보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빠의 자격'을 운운하는 보도이다.

보수언론들은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유민 아빠에 대한 각종 악성루머들을 확대재생산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유민 양 외가식구들을 취재하여 유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패륜적 행위

13) 미디어라이술 2015년 4월 28일

14) 언론개혁시민연대 2014년 8월 26일

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어떻게든 유가족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흠집 내려는 악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보수언론들은 세월호 유족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기사도 내보내고 있다. 300명이 넘는 희생자 유가족 사이에서 견해차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보수언론들은 이마저도 합의안에 반대하는 유족들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고 있다. 재합의안을 수용한 일반인 유가족들이 “단원고와 갈등이 벌어진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다.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는 정당, 단체에 대한 ‘딱지붙이기’도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다. 연일 사설을 통해 ‘야당 강경파’, ‘친노’, ‘친야’ 단체들이 ‘反정부투쟁’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위 전문꾼들에게 민생이 발목 잡혔다’는 ‘외부세력 개입론’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책임은 묻지 않고 갈등의 모든 책임을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떠넘기고 있다.---

<사례6 >TV조선 ‘세월호 민심 조작’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014년 8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로 TV조선 ‘세월호 민심 조작’보도를 선정했다. 민언련은 ‘TV조선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중의 의견을 선택해 전반적인 대중의 의견인양 포장해서 그것이 마치 여론인 것처럼 조작하는 보도태도를 종종 보여 왔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민언련이 밝힌 근거는 아래와 같다¹⁵⁾.

---TV조선은 <‘세월호 정쟁’ 시민도 질려>(11일, 이채현 기자)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갈등에 시민들이 지쳐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앵커는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 다른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이 굵지 않”다고 말했다. 기자는 특별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힘겨루기에 시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고, 이어 “국민들이 볼 때는, 민생은 뒷전이고 자기 생각만 앞세워서 나가려는 것 같고”, “자기네들 잘났다고 싸우고. 빨리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안타까워요.”같은 인터뷰를 실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요구지. 너무 과해요. 묘지를 갖다가 뭐 해달라하고”, “울론 내 새끼들 잃어버렸지만 마음 아파. 진짜 아프지만 나라 사정 봐야 되고”라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터뷰도 함께 실었다. 그리고는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 살림살이, 경제 문제였다고 시민들이 경제 걱정을 하는 인터뷰를 함께 담아 마치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애먼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진 것처럼 인식되게 했고 특별법으로 인한 여야의 마찰을 정파 간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게 했다.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를 막고자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충정은 내팽개치고, 유가족들이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치게 한 것은 왜곡을 넘어 교활하고 비겁한 여론조작이다.---

15) 미디어라이솔 2014년 9월 5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하는 2014년 8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로 JTBC의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관성을 밝힌 보도'도 강력한 최종 후보로 함께 올랐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¹⁶⁾.

---JTBC는 <대책위 "국정원, 세월호 운항관리 개입했다" 의혹 제기>(7/25), <세월호 노트북에 '국정원 지적사항'...국정원-세월호 관계는?>(7/28)에서 세월호 선내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복원한 '국정원 지시사항' 문서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이후 어느 방송사도 후속보도를 하지 않았으나 JTBC는 <보안측정 '주관'하고도 "모르쇠">(8/1)에서 JTBC가 단독으로 입수한 세월호 보안측정 결과를 통해 국정원 해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세월호만 유독 국정원에 '상세 보고'>(8/5)에서는 세월호와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의 '안전점검보고서'를 살펴보니 세월호와 다르다는 점, 특히 "사고가 났을 때 오하마나호는 소속 선사에 먼저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세월호는 국정원과 해운조합이 1차 보고라인에 올라 있"음을 보도했다.---

<사례 7> 세월호 특위 무력화시키는 정부행태 방관한 보수신문과 KBS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1일 정부가 27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조직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 시행령 내용은 진상규명국을 축소시키고 정원을 대폭 줄이는 수준이다. 정부 시행령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주요 업무의 주도권을 공무원이 쥐게 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각 부처 및 담당자간 소통 부재 등으로 빚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특위의 1차 조사 대상이다. 그런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보면,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해야 할 기획조정실 업무를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도록 했다. 조사 지휘 및 종합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과 진상규명 업무 최일선에 나서는 조사1과장도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맡게 된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416시간 농성에 들어갔고, 특위는 30일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특위조치 제대로 꾸리지 못해 유가족이 다시 거리에서 농성을 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민언련이 특위 관련 신문과 방송을 모니터한 결과, 특위 내부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 한겨레·경향신문만 비판 보도했고, 조중동과 방송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정부의 시행령의 문제점과 유가족과 특위의 대응 등에 대해서는 한겨레·경향신문과 MBC·SBS·JTBC만 보도했다. 보수언론

16) 미디어라이솔 2014년 9월 5일

은 ‘특위 내부문건 당·정·청 유출사건’과 ‘특별법 정부안이 촉발한 특위 파행사태’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세월호 특위 파행을 사실상 방조한 셈이다.

특위 내부문건 ‘당·정·청’ 유출 사건, 조중동과 방송사 모두 외면

3월 23일에 특위 내부 문건이 특위 파견 공무원에 의해 청와대와 경찰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어났다. 유출된 문건은 특위 지원단과 상임·비상임위원에게 배포받은 ‘주간업무 보고’로, 한 주간 특위 활동이 일자·시간별로 정리돼 있고 다음주 계획까지 기록돼 있었다. 특별법 제41조 “위원회 직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을 위해 이용해선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법률을 위반한 사안이었지만, 문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위 파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내부자료를 보고한 정황을 보도한 언론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이었다. 조중동과 방송보도는 전무했다. 경향과 한겨레는 이석태 특위위원장의 관련 기자회견(23일) 이튿날인 24일부터 양일간 ‘특위 내부문건 당·정·청 유출사건’을 보도했다. 경향은 일반기사 2건, 사설 1건으로 총 3건을 보도했고, 한겨레는 일반기사와 사설을 각각 1건씩 실어 총 2건 보도했다. 양 사 모두 24일 ‘특위 문건유출 사건’ 내용을 1면에 배치했다.

시행령 문제점과 특위 파행을 가장 많이 보도한 언론은 한겨레와 JTBC

한편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특위 파행’을 가장 주요하게 보도한 언론은 한겨레와 JTBC였다. 신문은 한겨레가 관련내용을 총 7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다. 이 중 일반기사가 4건, 의견기사는 3건이었고, 1면배치 기사는 2건이었다. 경향신문은 일반기사 2건, 의견기사 1건 등 총 3건의 기사를 보도했고, 조선일보도 일반기사 1건을 실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보도가 없었다.

방송 보도에서는 JTBC가 30일 3꼭지로 관련내용을 전했고 SBS가 1꼭지 보도했다. 그나마 MBC도 단신 1꼭지를 보도했는데 정작 KBS는 관련내용을 단 한 꼭지도 보도하지 않았다. TV조선·채널A 역시 시행령 정부안이 촉발한 논란을 다루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에게 폭력적인 이미지 덧입힌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청와대로 행진하던 세월호 가족協, 경찰과 충돌>(3/31)에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세월호가족협의회 회원 100여명이 30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고 전했다. 제목과 기사 첫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일보가 부각해 보도한 내용은 ‘폭력적인 세월호 가족’이었다. 기사의 소제목은 ‘의경 폭행 유가족 등 셋 연행’이었다. 12면 왼쪽 하단에 작은 박스기사 처리된 해당 기사는 청와대로 가던 세월호 가족들이 맞고 때린 내용들로만 구성됐다. 세월호 가족들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긴 했으나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시행령 철회 주장만 단신 처리한 MBC, '떼쓰는 특위' 왜곡된 인상 줄까 우려돼
 단신인 MBC 보도도 문제이다. MBC는 <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 면담 요청>(3/29)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전달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특조위를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말한 내용도 함께 전했다. 그러나 조직·인원·예산을 대폭 축소할 정부 시행령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선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석태 위원장의 발언만으로 구성된 ‘단신 보도’였으나 발언 이유에 대해선 탐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떼쓰는 세월호 특위’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낼 가능성만 높았다.---

<사례 8>세월호 특조위원과 시민을 폭력적 좌파로 몬 조선일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29일 정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한 뒤 이석태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과 4·16 가족대책위(이하 가족대책위) 측은 “입법예고안과 큰 틀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원안의 표현만 살짝 바꾼, 말장난에 불과한 수정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광화문 광장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무관심한 방송사

민언련은 4월 29일 6개 방송사의 저녁종합뉴스와 4월 30일 5개 주요 일간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발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았다. 신문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가 보도했다. 방송사들은 이렇다 할 비평을 달 수 없을 정도로 시행령 수정안에 무관심했다. SBS, JTBC, TV조선, 채널A는 관련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KBS는 1쪽지 보도했으나 특위의 입장은 설명하지 않은 채 수정안이 특위의 요구가 반영된 변화라는 정부측 발표만 다뤘다. MBC는 단신 처리하여 기본적인 내용 파악도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유일하게 관련내용 1면에 보도하고 유가족 요구를 거의 수용했다 제목 뽑은 조선일보

5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시행령 수정안 문제를 1면에 실은 조선일보는 타사와 달리 정부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특조위가 세월호 조사에 발목을 잡는다고 몰아세웠다. 농성 중인 특조위 위원 4인의 경력을 맥락도 없이 나열하며 ‘진보인사’임을 부각시키며 좌파몰이에 치중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1면 보도 제목은 <수정안 遺族요구 거의 수용 이젠 세월호 조사 시작해야>(4/30, 1면, 이진석·선정민 기자)이다. 동아일보 <“세월호 요구사항 10건중 7건 반영” vs “표현만 바꾼 말장난”>(4/30, 14면, 김준일 기자)나 중앙일보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 축소 … 유가족 “수용 못 해”>(4/30, 14면, 김민상 기자)처럼 양측의 입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제목과 달리 조선일보가 강력하게 옹호하는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은 것이다. 게다가 유가족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했다는 표현도 사실상 왜곡 보도이다. 소제목도 “특조위 또 ‘폐기’ 되풀이”라고 달아 마치 특위가 시행령 제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일보는 <시행령 쟁점 보완에도… 특조위 단어만 바뀐 수준 거부>(4/30, 10면, 선정민·유소연 기자)도 소제목을 “세월호 조사 발목잡는 특조위”라고 뽑으며, 특위를 몰아세우고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보도는 기획조정실장의 명칭 변경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격하”했다고 평가했다. ‘격하’는 다른 언론사에서는 전혀 없는 표현이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정부가 (특조위 등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면 특조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맞다”는 인터뷰를 실어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실은 것도 다른 언론사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4개 일간지와 KBS, MBC 저녁 종합뉴스는 사실관계 전달에 있어 이석태 특조위위원장과 해수부의 입장만 보도했다.

조선일보, 노골적인 특조위 비난과 좌파몰이 심각

조선일보의 좌파몰이도 여전하다. <전체 17명 중 유족·野·변협 추천받은 4명… 民辯 출신 등 진보성향 법조인>(4/30, 10면, 엄보운·김지연 기자)는 “시행령 수정안에 반발해 광화문광장 농성을 벌이고 있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4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인”이라며 느닷없이 색깔공세를 펼친다. 특히 이석태 특조위원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 선고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씨가 2008년 민주노동당(통진당의 전신)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을 때 추천사를 쓴 일도 있다”며 그런 과거 이력이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외에도 다른 위원들의 ‘젠더법학회 부회장’, ‘통일시대평화누리 실행위원장’ 등의 이력을 나열했는데 도대체 이런 이력들이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문제 될 것은 무엇인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재발 방지를 기원하는 모든 시민들을 국가 보물을 망가뜨릴 폭력 시위대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조선일보 왜곡 보도의 절정은 <광화문광장 행사 앞둔 불교 단체, 세월호 단체 때문에 속앓이>(4/30, 12면, 이옥진 기자)다. 이 기사는 4·16가족대책위와 특조위 위원, 시민들을 광화문을 무단 점거하고 돌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로 몰았다. 5월 1일과 2일, 4·16 연대의 광화문 광장 ‘범국민 철야행동’이 “국고 4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자 “서울시의 허가까지 받은 불교단체”의 행사와 겹쳤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조계종 관계자들은 세월호 집회 일부 참가자가 돌출 행동을 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축전에서는 내소사 괘불(보물 제 1268호)이 전시되고 고령의 신도들도 많이 있는데 최근 세월호 관련 단체들의 집회가 불법 시위로 번진 탓에 이들이 과격 양상을 보일 경우 보물 훼손이나 부상 등 불상사가 생기진 않을까”하는 걱정도 보였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국가 보물을 망가뜨릴 과격 분자며 몰상식한 자로 몰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시행령은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정상적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첫 시발점이다. 정부 책임 규명, 부실한 구조 구난 시스템 개선,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당연히 피해자 주축의 특위 스스로 시행령을 마련하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4·16가족대책위와 특조위,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의 요구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미진한 시행령을 내놓은 정부와 그 정부를 감싸며 특위를 공격하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비해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시행령 수정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은 없었으나, 조선일보처럼 일방적으로 정부 측 입장을 지지하고 사안을 왜곡하는 수준의 보도는 없었다.

경찰, 세월호 집회 연행자 ‘사상검증’ - 뉴스타파 보도(17)

뉴스타파는 지난 4월 18일 연행된 세월호 추모 집회 참여자들에 대해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이냐’ 등 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상 검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연행자들에게 ‘통합진보당 당원인가’, ‘NL계열인가 PD계열인가’ 등 사건과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를 차벽으로 봉쇄하고 물대포로 진압한 경찰은 100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연행된 사람 가운데는 21명의 유가족과 6명의 고교생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고교생 6명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5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명이 구속됐다.

뉴스타파는 구속된 연행자를 면회해 당시 상황을 듣고, 불구속으로 풀려난 시민들을 수소문해 만나서 조사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들어봤다.----<중략>

17) 뉴스타파 2015년 4월 30일 - 경찰이 세월호 집회 연행자를 사상검증 했다는 보도는 다른 매체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5. 기레기언론 등장에 대한 요인 분석

대중매체의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략 3가지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 즉 전체 사회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언론사 조직 특성과 사회와의 관계, 언론인 가치관, 자질 문제 등이 그것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후 1년 여 동안 나타난 부정적 보도의 원인도 위의 3가지 요인으로 나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1)정치 체제 등 사회구조적 차원의 분석

대중매체가 속한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 등 정치구조와 경제의 상태, 미디어조직의 물적 토대 등은 보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언론에 대한 국가보안법, 낙하산 사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부적절한 심의, 자본의 통제 등이 심각하다.

국가보안법은 언론자유에 가장 근원적인 사상과 상상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에 상당한 정도의 제약을 일상적으로 가하고 있다. 국보법은 찬양, 고무, 동조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어 대부분의 언론인은 자기 검열을 통해 이 법의 제재에서 벗어나려하는데 익숙하다.

독제체제하에서의 보도지침 등 국가권력에 의한 야만적인 언론통제가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고는 하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낙하산 사장 투하에 의해 언론사 경영권 장악을 통한 부당인사와 비판프로그램 폐지 등이 이뤄지고 정권에 불리한 보도 저지 작업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방심위가 ‘공정성’ 조항을 앞세워 수년 전부터 정치심의·청부심의를 일삼아 방송의 자율성을 짓밟고 공정, 공익 보도를 저해하는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공정성’ 규정은 방송 현업 종사자들을 괴롭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심각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방심위는 ‘공정성’ 조항을 앞세워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안에 대해 정권의 구미에 맞는 식으로 제재 결정을 내려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보도 가이드라인, 또는 자기 검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심위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적용할 때 매우 자의적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탐사보도가 주로 표적이 되고 있다. 방심위가 자의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공정성’ 조항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서 미국의 경우 오래전에 폐지되었다. 미국 언론 상황이 최상의 것은 아니지만 공정성에 대한 장기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낸 결론이라는 점에서, 우리 언론도 이제 이의 폐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본다.



자본의 언론에 대한 통제는 대단히 심각해서 광고주와 정권의 야합에 의한 광고통제로 정권비판 언론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광고주의 언론 통제와는 별도로 거대자본이 족벌신문과 함께 종편채널을 만든 것도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심각하다.

거대 자본은 언론 감시의 대상이지만 MB 정권 당시 언론사의 주주로 변신했다. 21세기형 자본주의 국가의 특성은 '기업이 지배하거나 쿠데타를 진행 중인 전체주의국가'로 불릴 만큼 자본의 지배력이 막강해지고 있다. 대자본이 정치, 언론 등 사회 권력을 조종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면서 이익을 강탈할 수 있게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⁸⁾.

탐욕스런 자본이 언론사의 주주로 참여하는 종편채널이 두 공영방송 시장을 점령할 경우 TV산업이 공영성과 공공성에서 얼마나 멀어질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JTBC 뉴스 프로가 단기적으로 박수갈채를 받지만 장기적으로 대자본의 방송 장악을 촉진하는 윤희유가 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못한다는 이중적 의미는 명확하다¹⁹⁾.

2) 대중매체 차원의 분석

미디어사회학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분석은 대중매체 소유주, 기자와 뉴스 주요 소스인 정부 관리들과의 상호관계 등이 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족벌언론사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충성이 가장 주요한 조직 핵심논리가 되면서 사실 보도가 아닌 왜곡, 날조 보도가 양산되고 있다. 정부나 기업이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 되면서 정부와 기업을 선전, 홍보하는 기사의 비중이 큰 것도 문제다. 선전, 홍보기사는 사안의 특정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단점, 역기능적인 측면은 침묵하는 특성이 있어 6하 원칙에 의한 일반적인 기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특히 남북 대치 상황이 심각해 남북한의 심리전적 정보가 남발되는 것도 문제다. 국정원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북한에 대한 '카더라'식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들이 기사의 형식으로 보도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보 소비자들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등은 여전히 대중매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노동자 장기 고공 농성, 시위집회 등이 줄을 잇는다.

18) 미디어라이솔 2014년 10월 29일

19) JTBC 뉴스 프로는 언론 교과서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한 내용으로 정상적인 방송의 모습이라 하겠다. 이런 JTBC가 특히 돋보이는 것은 다른 방송사들의 보도 프로가 수준이하인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장 등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은 '부당징계'나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2015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는 노조가 사내 지배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정권에 기대를 버려야 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똑같이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해 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려 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²⁰⁾.

MBC와 YTN이 자사 언론인을 불법 해직하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고 고통을 주는 것은 사회의 목탁이라는 언론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반사회적이 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다²¹⁾.

MBC는 2014년 7월 부당 해고 판결을 받은 자사 해직자 6명의 출근을 가로막아 논란이 되었다. MBC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박성제, 이상호 기자 등 해직자 5명은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MBC에 복직을 명령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MBC 상암동 사옥으로 출근했는데 MBC 경영진은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한다'면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이들의 출근을 가로막았다²²⁾.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영하 전 MBC본부장을 비롯한 44명의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은 언론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2012년의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1심과 동일하게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²³⁾.

MBC 경영진이 부적절한 기구 개편이나 인사를 통해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괴롭히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MBC는 지난 2014년 10월 잘 운영된다는 평

20) 언론노보 2015년 4월 28일

21) MBC, YTN이 자사 언론인을 해직 시키는 방법 등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다른 언론인들을 겁박해 언론자유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막는 저의가 숨어 있다. 한국 언론은 70년대 해직언론인, 80년대 해직언론인, 2000년대 해직언론인이 공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015년 2월,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광주 학살과 언론 탄압에 항거하다가 해직당한 기자들을 5·18 관련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5·18 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0년 해직언론인 문제가 30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80년 5월 해직언론인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다른 의원 11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는데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은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에서 '해직 언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미디어라이솔 2015년 2월 25일>.

22) 미디어라이솔 2014년 7월 7일

23) 미디어라이솔 2015년 4월 29일



가를 받던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보도본부에 사업부를 신설해 회사 안팎에서 공영방송의 위상과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MBC 경영진은 무려 110명에 이르는 능력 있는 기자와 PD들을 현업에서 대거 배제하는 인사를 자행, 기자를 예능국으로 발령하는가하면 PD를 사업부서로 발령 했다는 분노섞인 비판을 받았다²⁴⁾.

YTN 해직기자 6명이 6년째 복직이 되지 않았던 지난 2014년 10월 YTN노동조합이 이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YTN노조는 “해직사태 해결은 더 이상 해직동료들의 문제가 아닌 YTN이라는 언론사와 구성원 전체의 생존의 문제”라며 “모두의 생존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즉각 해직사태 해결에 나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YTN노조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였던 구본홍씨가 사장에 임명되자 공정방송을 외치며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6명이 해직됐다.

YTN 노조의 복직 촉구 성명이 나온 뒤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9명 중 3명의 해고, 3명의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나머지 3명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²⁵⁾.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일부 YTN 노동자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정권의 방송장악·통제에 면죄부를 줬다. 최근 쌍용차 판결에서 봤듯 법원이 더 이상 정의와 약자가 아니라 철저히 정권과 재벌의 편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KBS는 재난방송주관 방송사이자 국민이 지불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모범적 언론매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의 목소리가 높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시청률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KBS의 논조가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KBS가 소유구조나 외압 등의 외부적인 탓을 하는 것 보다는 기자들이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도록 우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⁶⁾. 김 교수의 이런 진단은 지난해 6월 길환영 사장이 KBS 직원들의 단합된 투쟁의 결과 물러나 언론자유 회복에 큰 기여를 했지만 길 사장 교체 이후 KBS의 세월호에 대한 보도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에 비춰 볼 때 의미 있는 지적이다.

KBS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권력이 공영방송 KBS위상을 파괴하는 외압행사를 막기 위해 여권의 의중이 반영되는 현재의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이사회가 야권 추천 이사의 동의를 필요하도록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 선임을 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KBS 내부적으로도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24) 미디어라이슬 2014년 11월 5일

25) 미디어라이슬 2014년 11월 27일.

26) 미디어오늘 2015년 4월 15일.

확보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의 보도편성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KBS 구성원들의 공영방송 지키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공정 방송이 언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3) 언론인 가치관 등 개인적 차원의 분석

대중매체 종사자, 즉 언론인들의 사회성, 가치관 등에 대한 분석이다. 긴 역사와 권위를 지닌 유력 대중매체는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종사자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등이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 '좋은 미디어를 만드는 기준'도 엇비슷한 특성이 있다. 또한 미디어 소비자들이 향유하는 문화적 특성에 민감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TV뉴스의 순서가 방송사가 다른데도 유사하거나 보수, 진보신문들이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일부 진보지들이 남북문제에서 보수언론을 닮아가는 현상의 원인은 남북 대치와 갈등의 장기화, 국가보안법의 구속 속에서 일부 수구 세력이 휘두르는 중복몰이, 색깔공세 등을 회피하려는 언론사의 자기검열이 일상화되고 언론소비자들의 보수화 경향에 주목한 결과로 추정된다.

세월호 참사 1년 뒤인 2015년 4월 13일 방송기자연합회가 연 '재난방송보도를 위한 보도국 안에서의 실천과제' 토론회에서 'KBS등 언론은 기자를 재교육하고,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보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쟁이 우선인 현장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²⁷⁾. 무한경쟁을 벌이는 언론사의 과당 경쟁이 일선 기자를 압박해 객관,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언론인이 회사의 부적절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충족시킨다는 대원칙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때 기자들이 유가족을 배려하지 못한 선정적 취재 경쟁을 벌인 것은 새로운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전해야 한다는 보도경쟁이 만든 결과로 이런 현상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난방송 담당자가 재난상황에서 보도를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취재관행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언론사 '윗선'의 변화가 절실하지만 정작 언론사 간부급들은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NHK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자가 재난 보도를 담당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데스크의 예단이 아닌 전문기자의 견해가 보도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기를 하지

27) 미디어오늘 2015년 4월 13일



않는다는 것이다.

대중매체 언론인들은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된 민주주의 공간에 기여할 수 있는 체질 변화를 적극적, 효과적으로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언론이 정치 및 자본 권력과의 숙명적인 관계가 구조적 구속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도 언론인들이 언론권력 소속자로 누리는 갖가지 '특혜'를 고려할 때 사회적 파수꾼으로써의 소명의식,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언론이라는 제 4부 소속원의 정체성을 확립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완구 총리와 언론인들의 간담회의 경우를 통해 그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월 <이완구 후보 권언유착적 '언론관'과 깡패 두목 같은 폭언 경악 - 한국일보의 이완구 보도 기피, 각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당시 이완구 총리후보가 몇몇 정치부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를 통해 발언한 녹취록에서 '유사 이래 가장 추악한 권언유착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²⁸⁾.

--이 후보는 전화 한 통화로 방송사 패널을 빼라고 명령하고, 방송사 간부는 명령에 즉시 복종했다고 말하면서 "어이 이 국장, 야 김 부장" 하면서 기자들을 자신의 부하 부르듯 했다. --언론인에 대해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른 채 죽을 수 있다"고 한 그의 조롱섞인 망언은 언론인에 대한 헐박이고 폭력이며, '인간적으로 친한 언론인'은 교수도 만들고 대학 총장도 만들어 주었다는 그의 힘 자랑은 언론인들에게 당근의 유혹과도 같은 것이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자들이 그들의 상사와 선배와 언론 전체를 능욕하는 이완구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제지도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더구나 해당 언론사가 총리 후보의 이 같은 경천동지할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도 기사화하지 않은 채, 녹취록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해당 기자를 '취재 윤리'로 징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해당 기자로부터 취재 내용을 보고받고도 보도를 하지 않은 채, 언론의 책임과 국민의 알 권리를 내팽개친 데스크의 반성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디어오늘은 <세월호 참사 1년, '기레기' 언론의 끝을 보여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4월 16일 사람보다는 돈을 싣고 항해하다가 바닷속으로 침몰해 버린 건 비단 세월호만이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언론의 무책임·선정성·편파·반인권 등 총체적 문제와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언론의 '양심'은 여전히 가라앉은 채 '보도 참사'는 되풀이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실었다²⁹⁾.

28) 민주언론시민연합 2015년 2월 11일

29) 미디어오늘 2015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이를 추적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도 없다. --- ‘국경없는 기자회’까지도 성명서를 통해 “국가재난 시 대통령 일정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견에도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질문한 기자는 한 명도 없었다.---

언론보도를 분석할 때 전체 사회라는 구조 속에 갇힌 개인인 언론인이라는 관점이 적용되는 일은 교과서적 관행이지만 한국의 총체적 민주주의 수준으로 볼 때 구조 탓만 하는 것은 충분치 않아 보인다. 언론인 개개인들의 상식과 양심이 언론 구조 속에서 실종되고 수치심이 전혀 발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³⁰⁾.

30) 인간의 감정 가운데 수치심은 후천적 교육의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위공직자 청문회 등에서 나타나는 파렴치한 행적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무감각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국적으로 예비범죄인을 부추기는 일들이 빈발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치심을 느끼는 언론인’이 양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치심을 느끼는 언론인들이 많아지면 언론구조가 수치심을 아는 언론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에 대신해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중매체의 사회적 책무는 환경감시 기능(surveillance function), 상관조정 기능(correlation function), 의제설정(agenda setting) 기능 등으로 이런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대중매체의 존재 의미가 약화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부패하거나 약화된다.

세월호 참사는 전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집적되어 발생한, 광주항쟁 이후 최대의 참극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중매체의 적절한 환경 감시, 상관조정, 의제설정 기능이 수행되지 못해 이명박 정권이래 지속되고 있는 정치 및 경제 민주주의 후퇴를 막거나 그것을 원상회복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의 하나인 기레기 언론의 등장 원인은 그 뿌리가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자력에 의한 해방을 달성치 못한 채 분단된 불행한 역사에 닿아 있다. 이어 이승만, 박정희 독재에 이은 광주 학살, 민주화 운동의 분출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광주항쟁 당시 한 대중매체는 부당한 보도로 성난 시민들에 의해 불타기도 했다. 대중매체는 87년 6월 항쟁에 이은 평화적 정권 교체 등으로 확보된 언론자유를 전체 민주주의 공간 확대에 생산적으로 활용치 못했다. 대중매체 일부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강력 저항했으나 소기의 목표를 달성치 못하고 박해의 대상이 되어 다수가 해직, 정직 등을 당했다. 정권과 그 하수인격인 일부 언론사 경영인들은 저항언론인들을 '일벌백계'식으로 탄압해 다수 언론인의 굴종을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독재정권에 우호적인 세력이 박정희, 전두환 독재체제 저항했던 해직기자들의 원상회복을 저지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도록 만드는 것은 언론통제를 위한 공작정치의 일환이라 하겠다.

오늘날 언론과 정치 자본권력의 관계는 독재가 판치던 냉전시대의 그것과 같지 않다. 21세기 자본·정치권력은 언론을 선전 홍보, 기구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식의 주먹을 앞세운 언론통제 방식과 다르지만 그것은 훨씬 정교하고 위압적이다.

박근혜 정권은 MB정권의 언론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그 특별법 추진 속에 거듭 확인된, 부도덕하고 무능한 현 정권은 불법 해직, 부당 인사조치 등이 자행된 MBC, YTN 등에 대해 언론사 내부의 문제라면서 뒷짐진채 바라만 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 대책은 이명박 정권이 초토화 시킨 공영방송의 망가진 상태를 방치하거나 해직기자의 복직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방관하면서 방심위를 통한 정치심의, 표적심으로 방송의 탐사 보도 등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방심위는 공영방송 등에 대한 정권의 '검열기구'인 반면 종편에 대해서는 한없는 아량과 관대함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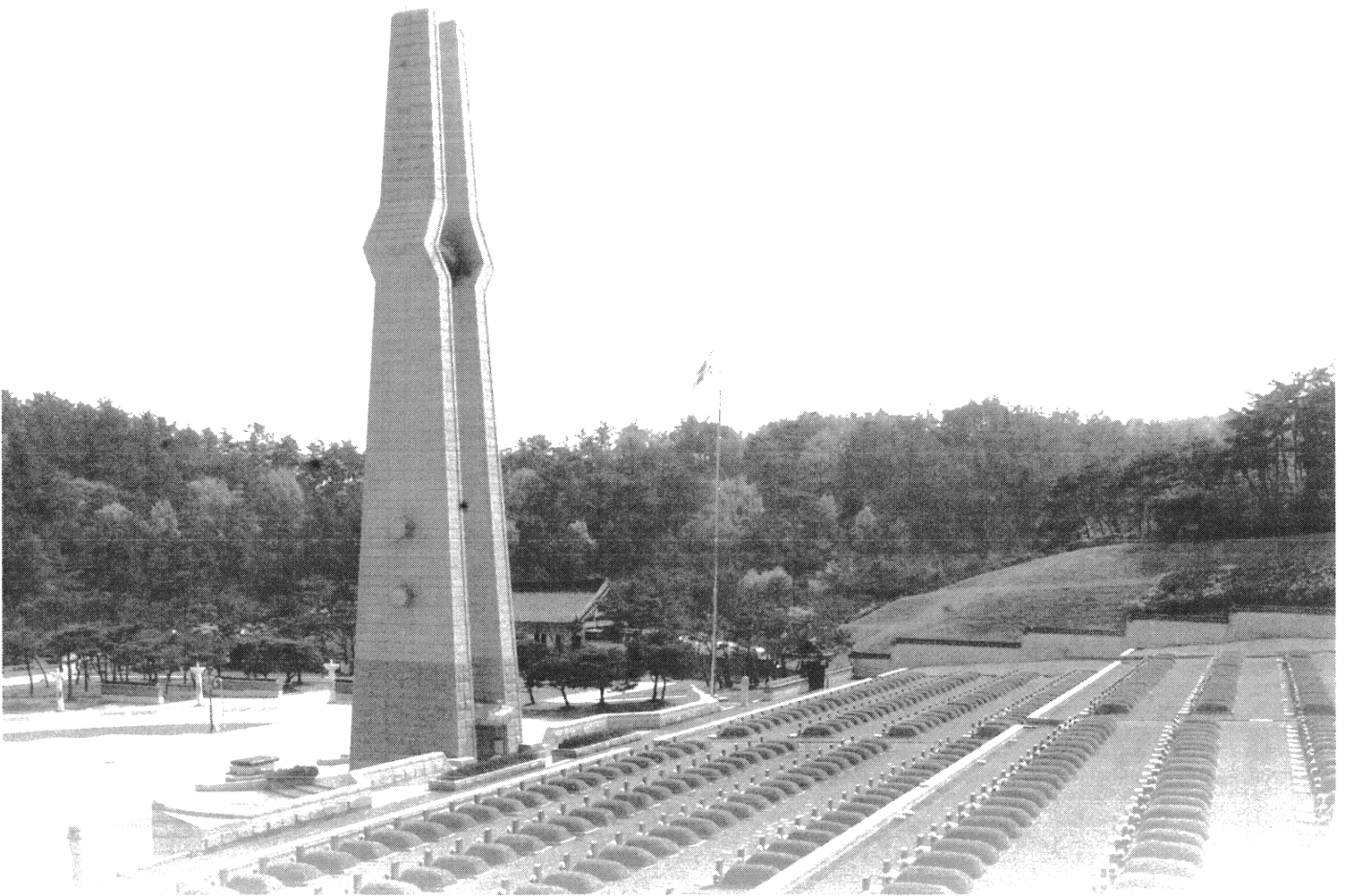
방송심의제도가 지난 수년 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흉기로 휘둘러졌으며 정부를 비판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제동을 거는 가장 심각한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방송 보도 논평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주로 정치적 사안에 집중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방송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시될 정도다.

언론인들이 언론의 4부적 책무에 대해 외면하거나 정치와 자본 권력, 언론사 경영진의 불법 또는 부당한 경영에 억눌리거나 희생되는 것은 큰 문제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언론이 제4부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반체제적 언론으로 전락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언론인들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중매체의 언론인은 자기 소속사가 정상적으로 기능해 국민에게 알릴 의무를 최대한 만족스런 수준으로 수행할 무한 책임이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이 제4부의 권력기관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은 사회의 소금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사회적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가 정치, 자본권력의 하부기구로 전락하게 될 경우의 언론은 전체 사회를 망가뜨리는 반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다.

한국형 후진적 정치와 자본 권력은 언론을 하부기구로 삼기위해 시대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이론과 방법을 개발하는 작태를 보인다. 언론인들은 이런 점을 직시해서 정상적 언론을 확립할 수 있는 첨단적 언론 자유 수호 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 사회의 목탁, 소금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언론 구성원들의 의식화가 필수적이다. 언론사 안팎을 살피고 바로잡는 노력이 일상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토론문



한국 언론의 구조적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강기석<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광주민주화운동과 언론과의 관계라는 주제에 관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 보고 싶었던 것은

첫째, ‘광주사태’ 당시 언론의 보도가 어떠했으며 이것이 사태 전개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둘째, 광주가 완전히 시민군에 장악된 상태에서 언론활동은 어떠했는지, 여기에서 본받을 점이나 더 잘할 수 있는 점은 없었는지

셋째,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승화될 때까지 언론의 역할은 어땠는지

넷째, 광주민주화운동이 역사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종편 등 언론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광주시민과 진보언론 진영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주제와 관련, 당시 MBC가 시민들에 대해 불탄 사건의 배경을 파헤쳐가다 보면 어느 정도 단서가 잡힐 것이라고 보며, 두 번째 주제는 대안언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모티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 언론계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넷째 주제 역시 지역언론인과 학자들, 진보언론계와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과제가 돼야 할 걸로 믿는다.

그런 점에서 안종철 박사의 제1주제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를 잘 정리해 주었지만 언론에 관한 언급이 대단히 부족해서 유감이다.

고승우 박사의 제 2주제는 반대로 언론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지만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는 아주 간단한 언급으로 끝나고 주로 세월호참사 보도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고 박사가 발표에서 잠깐 비쳤듯이 세월호참사보도의 양태는 사태 당시, 수습과정, 진상규명 과정, 배보상 과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보도와 아주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란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종편 등에서 집요하게 폄훼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세월호참사 보도의 앞날을 녀



넉히 집착하고도 남을 정도다. 따라서 고 박사의 주제의식은 이번 세미나의 뜻에 걸맞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승우 박사는 주로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한국 언론을 '기레기언론'이라 하면서 그 원인을 3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대중매체가 속한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 등 정치구조와 경제의 상태, 미디어조직의 물적 토대 등은 보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언론에 대한 국가보안법, 낙하산 사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부적절한 심의, 자본의 통제 등이 심각하다고 한다. **사회구조적 차원의 분석**이라고 했다.

둘째, 대중매체 차원의 분석으로써 대중매체 소유주, 기자와 뉴스 주요 소스인 정부 관리들과의 상호관계 등이 보도에 미치는 영향을 들고 있다. 족벌언론사 내부의 조직논리와 공영방송의 낙하산 인사를 왜곡날조보도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남북문제에 관한 국정원의 정보독점도 문제다.

셋째, 언론인의 가치관 등 개인적 차원의 분석을 하면서 언론인들이 서로 비슷해지는 습성, 자기검열, 특종경쟁 등을 객관,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일선 현장의 언론인이 회사의 부적절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충족시킨다는 대원칙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한다.

나는 고 박사의 분석과 제안이 대체로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노엄 촘스키가 권력에 대한 위치견(감시)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권력의 가이드견 혹은 애완견 노릇을 하는 원인과 양태를 '선전모델'로 설명하는 것과 어느 정도 상통한다.

선전모델의 기본 요소는 5개인데 이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보강한다.

1. 언론의 규모, 소유권, 수익지향성
2. 언론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사업허가서로서의 광고
3. 정부, 기업, 그리고 이들 일차적인 정보원이자 권력의 대리인들로부터 자금과 인정을 받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언론의 의존
4. 언론을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비난(flak)과 외압
5. 국가적인 종교이자 통제 매커니즘으로서 '반공주의'

하지만 노엄 촘스키는 고 박사가 3가지 분석틀 중 세 번째에서 지적한 언론인의 가치관이나 취재양태, 저널리즘에 대한 자세 등을 기본 요소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추측컨대 언론인 개인의 가치관이나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 자세 등은 기본 요소가 아니라, 기

본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형성되는 부차적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나는 촘스키의 견해에 동의한다.

오늘날 한국 언론의 문제는 단순한 저널리즘이란 직업적 윤리, 보도의 원칙, 기자의 소양과 자세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다면 고 박사처럼 보도의 양태, 즉 잘못된 보도를 사례 별로 열거하고 그 문제점만을 부각시키는 것(즉 여기에서도 언론의 문제를 저널리즘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보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언론의 구조적 문제점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 언론의 문제는 기자 개인의 문제 보다도 편집국.보도국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가 더 크며 그것 보다도 언론사 자체의 소유구조와 운영방식, 경영방식, 인사원칙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와 우리 나라 지배층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대한 처방이다.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보도와 세월호참사 때의 보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는 지배층의 도구로 이용됐고 후자는 스스로 지배층의 일원이 됐다는 점뿐이다.

<참고>

노엄 촘스키의 5개 기본 요소는 다음의 몇 가지 공식에 따라 여론을 조작한다.

1. 언론은 거대한 이해관계에 해로운 기사들이 노출되면 재빨리 사라지도록 만든다
2. 공식적인 관점과 반대로 만들어지는 주장들은 강력한 비판을 불러오며 정부와 시장이 나서서 그 주장의 팽창과정을 통제한다
3. 제도가 지지하는 주장에는 이러한 통제를 하지 않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평은 언론으로 하여금 적을 맞아 더 흥분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
4. 언론은 거짓의 무게를 견디다 못한 주제가 발각되면 재빨리 텐트를 걷고 다른 주제로 이동한다

기사 위치, 기사량, 제목, 어휘사용 등 흥미와 분노를 일으키는 여러 방법이 가치있는 희생자들에게는 분명하고 극적으로 보도되고 휴머니티를 부여받아 독자의 관심과 동정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과 문맥을 할당받는데 가치없는 희생자들은 가벼운 줄거리, 최소한의 인간화, 흥미와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다루어 진다.

한국 주류 수구언론의 기준

보수정권 만들기, 반공주의, 재벌편들기, 노조때리기, 시민단체 및 진보인사 매도하기, 미국중심주의



사의 절대권력, '목사는 하나님 만이 벌할 수 있다'는 신화적이고 제왕적인 교주주의 등의 비민주적 행태, 구원받은 성도라는 유토피아적 폐쇄성으로 사회문제를 외면하거나 기득권적 보수 이데올로기 화 등 한국 교회에서 일상화 되어 있는 종교적 모순이 세월호 사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무기력, 무능의 관료주의 모순

2014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에서 목격된 것은 바로 국가 기관들의 관료주의적 자폐성이다. 청와대, 해수부, 해경, 군 등 국가 기구들은 자신들의 관료주의적 행정 메커니즘에 매몰되어 참극의 현장에서 누구하나 책임지고 의사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책임지지 않는 위기관리 시스템은 관행과 타성, 탁상행정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 줬다. 또한 해경과 언딘의 담합 구조(해피아), 유가족의 요구를 매번 묵살했던 군림하는 관료 등으로 국민을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국가 기구가 오히려 프랑켄슈타인이 되어 버렸다.

막스 베버는 다양한 사회 제도, 기구, 조직 등이 자체적인 논리에 의해 작동하게 되면서 개인들은 바로 이 작동 논리에 예속되기 시작했다고, 관료주의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조직 이성(institutional reason)이다. 각 국가 기구는 자신이 존재하는 본질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각인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조직 이성은 국가 기구가 특정 세력이나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항시적이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사회의 공권력에게서는 이러한 조직 이성을 찾기 어렵고 오직 자폐적 관료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러한 관료주의와 맞서 광화문과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넷째, 불투명, 불통의 지도자

세월호 골든타임 7시간, 대통령 박근혜는 어디에? 지금도 이에 대한 의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4월 16일 아침 7-8시 사이 세월호 침몰시작, 수현군 마지막 통화 10시 14분, 단원고 학생 마지막 카카오톡 10시 16분, 세월호 수면 아래로 완전히 사라진 시각 12시 30분 경, 그때 까지도 대통령의 행방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고 보고하지 못했으며, 단지 오후 늦게 나타나 세월호 구조에 대해 질문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적 재난에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마치 임진왜란 때 선조를 연상케 한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해수부, 해경, 기업에 돌리고, 언론을 통제를 강화하여 KBS, MBC 등 방송과 신문을 정권의 경비견화 함으로서 '기래기'(기자 쓰레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유체이탈식 리더십은 “군림하되 책임지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으며,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포기한 행태이다. 이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의미하고,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지금도 세월호 특별법 왜곡, 특위의 무력화, 인양문제 회피, 돈과 언론플레이로 여론 조작 시도 등 더 이상 국가 행위라 할 수 없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루소는 “대의 민주주의가 시민 개개인의 의지와 희망을 담지하지 못하며, 다만 형식적인 대표성만을 가질 뿐이다”라고 예견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것을 위임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헌법과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 개개인의 의지와 희망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위임 받아서 실행해야하는 데 있다. 대통령의 통치는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책임지고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에너지이다. 국민주권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이제 시민의 뜻,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서 실천하는 서번트(servent)적 지도자를 찾아내고 키워야할 것이다. 올바른 지도자가 나라를 바르게 이끈다. 이제 시민이 나서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제2의 세월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사회 모순 앞에서 언론의 역할

1) 왜 ‘기레기’인가 ?

세월호 비극은 이사회에 골마터진 부위를 마치 이명래 고약처럼 전술한 바와 같은 모순들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나타났던 썩은 부위가 언론이었다.

왜 기레기를 수 밖에 없는가?

그 첫째 이유는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언론의 행태에서 나타난다. 소위 말해서 20세기 초, 전문 저널리즘이 탄생하면서 시작한 탐사 혹은 조사 저널리즘(invertigation journalisme), 사실을 치열하게 파헤치고,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자 하는 기자들의 피나는 노력... 세월호 비극에서 이상호 기자 등 몇몇을 빼놓고 어떤 기자도 보여주지 않았다. 왜 사건 현장에 기자가 가야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둘째, 세월호 비극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모순구조를 볼 수 있는 지적 시각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임기응변적 사건 진행 상황 만을 급급히 쫓아가는 저급한 저널리즘의 현실.

세월호 사건 초부터 지속적인 오보를 내고, 정부 브리핑 만 나팔수가 되어 반복하는 언론의 행태에서 시민들은 사건에 대한 진정한 정보를 접할 수 없게되고, 나중에는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아이들이 희생된 직접적은 문제인 기업의 구조적 부도덕성, 왜곡된 종교, 관료주의, 책임지지 않고 군림하는 지도자 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전혀 없이, 센세이셔널, 황색저널리즘을 통해 시청률만 높이려하는 행태는 정말 패륜적이었다.

셋째, 권력의 감시견 역할을 하라고 한 국민의 명령을 배반하고, 청와대의 경비견이 된 거짓 언론, 청와대의 집사인 길환영 사장 문제 이전에 KBS 전반적인 기득권적 문화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KBS 앞에서의 언론 시민 연대 시위 중 길환영 사장 사퇴 소식이 들리자 돌아서서 KBS로 돌아가는 언론인과 기자들의 뒷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저들을 위해 이것을 해야 하는지 회의감을 느꼈다. 그당시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요즘들어 절실히 느낀다. 과연 지금 KBS가 얼마나 변했나?

넷째, 언론은 제3의 권력이 아니다. 언론은 한 사회를 유기하기 위한 제4의 기둥이다. 정치, 경제, 교육과 더불어 언론은 사회를 지탱하는 독립적 기둥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언론이 정치에 기울어져 있다. 정치부 기자가 아니라 정치 기자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집은 무너지게 돼있다. 언론이 정치로 기울어지니, 이 사회가 점점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쓰러지고 있다. 세월호 비극은 언론이 얼마나 자립성, 독자성이 없이, 소위 영혼없는 언론, 받아쓰는 기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담합과 비리, 불법 변조로 얼룩진 기업, 교주화, 절대 권력화로 디스토피아(distopia)가 된 종교집단, 관료주의와 보신적 기득권(해피아, 관피아)에 갖혀 있는 관료사회, 군림하되 책임지지 않는 유체이탈식 리더십...

이 중 어느 하나 드러내고 비판하고자 노력한 언론이 없었다는 것이... 이시대의 진정한 비극인 것 같다.

폭주하는 언론과 냉소하는 대중의 공모가 문제

한 선<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두 분 선생님 원고 잘 읽었습니다. 안종철 박사님 원고는 <518 민주화운동의 시작과 전개>를 정리하신 뒤 근래 인터넷, 특히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는 5·18 폭동설과 같은 5·18 왜곡 문제를 정리하고 반론을 해주셨습니다. 고승우 박사님은 5·18과 직접 연관이 없는 듯 보이지만, 한국 근현대사를 거치며 우리 언론이 보여주었던 문제점이 응축돼 있는 세월호 관련 논의를 정리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글 모두 잘 읽었습니다. 두 글 모두 토론이나 논쟁점이 있는 글이라기보다 모두가 공감할 내용 위주여서 제 토론은 두 분 선생님이 하신 문제제기에 덧붙여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5·18 왜곡 문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왜곡문제, 즉 일베와 5·18 왜곡 문제입니다. 일베는 ‘홍어택배’ ‘단원고 어묵 인증’처럼 매우 혐오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사이트여서 많은 사람들이 괴물 취급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일베는 고상하게 말하면 유희와 놀이의 공간, 일베식으로 표현하자면 ‘병맛’ 인터넷 문화가 응축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일 뿐 사회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일베를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일베가 보여주고 있는 반사회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일베를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접근하고 평가할 때 일베는 사라지기보다 제 2, 제3의 일베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일베가 보여주는 지역차별, 여성혐오, 다문화나 소수자 경멸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일베와 인터넷 문화를 논의하는 다른 공간에서 더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만 5·18과 관련해서만 언급하자면 너무 조급하고 과민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어택배처럼 광주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역차별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잘못된 팩트 강조에 대한 대응책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디스패치, 일베와 같은 곳들이 ‘팩트’를 강조합니다. 달리 말해, 일베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518 왜곡은 홍어택배가 아니라 518 남침설, 북파공작원 파견설과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



기가 사실(fact)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지만원, 역사학도 등으로 알려진 보수극우 논객들이 이에 앞장서고 이들의 주장이 일베 등에서 팩트로 전달되는 한 5·18에 관한 왜곡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할만한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역사학계에서 발간된 논문 한 편을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읽게 되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만큼 청소년들의 5·18 관련 인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16과 5·18의 역사적 평가>를 묻는 연구였는데,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아직은 5·18의 민주화운동으로 인식하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기폭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왜곡의 주요 쟁점인 북파설 등을 믿기보다 '계엄령의 선포-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집단발포-시민군의 형성-저항과 죽음'이라는 제대로 된 내러티브 구조로 518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일베 현상이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의 역사인식은 기억투쟁을 통해 언제든 재구성되는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5·18에 대한 왜곡에 단호하고도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우리 언론이 보여준 고승우 박사님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종편문제입니다. TV 조선과 채널A에서 5·18 남파 간첩설에 대해 방송했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일베 사이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편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며, 식당에 가보면 아예 이들 종편만 틀어져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선정적이고 말초적인 내용, 소위 정치평론가라는 이들이 나와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전달하는 상황, 더욱이 자극이 일상화되다보니 문제의 식마저 갖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세월호 관련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거나, 세월호의 원인을 일개 회사나 선장으로 몰고 가는 담론의 최선봉에 이들 종편과 조중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편의 문제는 매우 복잡적이어서 이를 테면 JTBC를 단순하게 문제적인 종편의 범주에 넣을 수 없게 되었고, 역으로 MBC가 과연 공영방송의 기능을 하고있는지에 관해서도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이처럼 '폭주하는 언론에 냉소하며 공모하는 공중'입니다. 모든 잘못이 권력이나 언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냉소하는 대다수의 대중들, 이는 결국 이들에게 공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하는 숙제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편의 5·18 역사 왜곡과 편협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원인

조기선<전남 CBS 보도제작국장>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편협이 도를 넘고 있다. 5·18에 대한 왜곡과 편협에는 안종철 박사의 주제발표처럼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과 일간 베스트, 지만원씨 등이 5·18 왜곡과 편협의 대명사였다. 이들 집단은 개별적으로 활동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연대하면서 5·18을 폭동으로 왜곡 날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예를 들어 전사모 홈페이지를 보면 ‘광주와 전두환 대통령 각하’라는 글에서 전사모 회원은 지만원씨의 글을 인용해 5·18을 왜곡하고 있다.

이들 집단 외에 최근에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종합편성채널 즉 종편들이 5·18에 대한 왜곡과 편협에 적극 나서면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종편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시청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종편에 의한 5·18 역사 왜곡과 편협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50대 이상의 보수적인 성향의 종편 시청자들이 종편의 보도내용을 가감 없이 수용한다는 점에서 종편의 5·18 왜곡 보도가 초래할 파장은 적지 않다. 왜곡 날조된 사실이 반복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면서 전혀 근거 없는 북한군의 5·18 개입설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안 박사의 발표처럼 조선일보 계열의 TV조선과 동아일보 계열의 채널 A가 5·18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매체는 탈북자들을 출연시켜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5·18 개입설을 유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포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처럼 종편에 의한 5·18 왜곡이 간헐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데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와 각종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5·18에 대한 북한군의 개입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5·18 왜곡에 대한 대응은 뜻뜻미지근한 실정이다. 정부가 5·18 역사 왜곡과 편협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처벌 의지를 밝혔다면 현 정권의 흥위병 역할을 하는 종편이 대놓고 5·18 역사 왜곡을



일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의 대표적인 사례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부실하고 미온적인 방송심의 문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6월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에이의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소위 심의위원 5명은 모두 두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의견을 내놓고, 전체 회의에서 법정제재 등 2번째로 무거운 중징계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법정제재에는 '과징금 부과',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가 있다. 심의위원들은 두 프로그램이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 방송법상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들 방송을 방통심의위에 심의 요청하면서 최고 징계 수준인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통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5·18 왜곡 날조 방송을 일삼고 있는 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5·18 왜곡 날조 방송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면서 종편들이 사과방송을 하기는 했지만 진정어린 사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방통심의위에서 진술을 한 채널 A 관계자가 '5·18 때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했다.

북한군이 5·18 당시 투입됐다는 가공의 사실을 날조해 방송했던 두 종편에 대해 민주당과 언론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 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현 정부가 5·18 왜곡을 일삼는 종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방식도 문제다. 방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6명은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결국 여야가 6대 3의 비율로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수 밖에 없는 구도를 갖고 있다. 이런 여당 편향적인 구성방식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가 언론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종편의 5·18 역사 왜곡 날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3가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미온적인 입장에 비춰볼 때 단기간에 입법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종편의 5·18 역사 왜곡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연하게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만으로는 종편의 불공정 보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2013년 TV조선과 채널 A에 대한 중징계 이후 종편의 5·18 왜곡과 편회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 종편의 성향상 언제든지 5·18 왜곡과 날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는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 5·18 역사왜곡대책위는 지난 2013년 광주지역 383개 기관과 단체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과 5·18 역사왜곡 관련 법률 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의 구성이 광주지역의 기관단체로 국한된 한계가 있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5·18 역사 왜곡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대책위에 타 지역 기관단체는 물론 새누리당의 개혁적이고 양심적인 국회의원 등을 포함시켜 5·18 왜곡과 편회 문제를 진영논리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언론, 미래는 없다

김옥렬<광주전남민언련 이사>

두 분 발제자의 내용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논란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안종철 박사는 언론을 통해 전파된 5·18의 진실과 그 왜곡상을 정리해 주었다. 두 발제자가 5·18과 세월호 사고라는 거대한 이슈와 관련해 언론이 이를 어떻게 잘못 다루고 책임을 방기했는지에 대해 잘 정리했다. 시대와 장소, 성격을 달리하는 두 사건이지만 사건의 전개과정을 꿰뚫는 언론이라는 고리의 특징은 흡사한 것 같다. 아마도 이런 토론회에 두 사건을 같이 다룬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본다.

세월호 사고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정부발표만 받아쓰기며 확성기 역할에 충실한 언론이 '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된 배경을 밝히려 한 고승우 발제자의 발제문은 적절한 지적이다. 특히 '기레기언론'의 등장요인을 정치체제 등 사회구조적 차원의 분석, 언론사 조직 특성 등 대중매체 차원의 분석, 언론인 가치관 등 개인적 차원의 분석 등 세 방향에서 찾아보려 한 시도는 적절하다고 하겠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핏줄이어야 할 언론이 한국에서는 흐름을 막는 동맥경화적 존재로 더 크게 기능하는 우리 언론의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취재했던 박영훈 목포MBC 기자는 △참사 초기 오보 △정부 발표 받아쓰기 보도 △유병언 행적 쫓기식 보도 △세월호 피로감 호소 보도 △유가족 폄훼 보도 △시행령 논란 침묵 △인양에 부정적 여론형성 보도 △대대적인 배보상금 보도 등을 우리 언론의 문제점으로 비판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을 보도한 언론행태는 사건사고의 실체에 접근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천착하기 보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검열하는데 익숙한 한국 언론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워낙 크고 방대한 사고이다보니 그럴 수 있겠거니 십분 이해한다 치더라도 지난 1년간 우리 언론이 보여준 태도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는 현직 언론인이나 언론단체, 시민사회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만 보여준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박 기자가 언급한 문제를 우리는 단어만 바꿔 35년전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언론행태로 이야기해도 하나도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지난 35년간 △민주화 운동 초기 비보도 또는 왜곡 보도 △정부 발표 받아쓰기 보도 △북한 관련설 쫓기식 보도 △5월 피로감 호소 보도 △유가족 또는 피해자, 광주시민 편취 보도 △발포자 등 진실 논란 침묵 △5·18정신의 현재화, 전국화 등에 부정적 여론형성 보도 △보상금 보도 등 마치 판박이같지 않은가?

발제자인 고승우 박사도 지적했듯이 세월호 사고에서 보여준 언론의 행태가 5·18 당시 언론의 행태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니 나아가 해방직후 일제청산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언론의 태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언론의 DNA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거나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왜곡하거나, 정부 또는 권력의 입맛대로만 보도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세력을 되치거나 무시하는, 아주 독성이 강한 잘못된 구조를 가졌는지도 모르겠다.

따져보면 '고기도 먹어본 이가 잘먹는다'고 우리 언론이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DNA보다는 반대의 경험을 가진 유전자 구조가 크다고 해도 잘못된 지적은 아닐 것이다. 역사를 바꾼 특종과 실체를 파헤친 역작의 기억이 없지 않으나 100년여 역사 내내 침묵하고 왜곡하고 외면했던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언론이 전면에 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보다 뒤에 숨어 있었던 기억. 5·18때 진실을 외면하다가 화염병을 맞은 미디어에 대한 기억도 한 예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잘못을 계속하는 언론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승우 박사의 지적대로 그 기저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보도태도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언론 스스로의 개선의지는 약하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요구가 없진 않으나 미미한 가운데 언론은 과거에서 배우고 잘못을 고치기 보다 답습만 계속하고 있다.

언론에게 역사에서 배우고 잘못을 뉘우쳐 바른 길을 가라는 주문은 '언론'이기에 가능하다. 언론은 단순히 이윤을 밝히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발전을 좌우할,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야할 운명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게 언론이기 때문이다. '대중매체가 정치, 자본권력의 하부기구로 전락할 경우 언론은 사회를 망가뜨리는 반 사회적 흥기가 되기 때문'이다.

5·18 35주년을 계기로 우리 언론이 다시 한번 지난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반성의 계기, 새 출발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언론

또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모쪼록 언론자유를 회복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해 이 사회의 진정한 목탁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1주년을 맞아 제 언론단체들이 냈던 성명서 한 부분을 인용하며 그런 약속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세월호 1주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시 결연히 약속합니다. 부끄러운 짓을 참회하면서, 또 다시 부끄럽게도 약속합니다. 기레기 신세를 청산하겠습니다. 기레기의 벽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기레기의 폭력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레기로 남으려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규탄하겠습니다. 기레기들이 판을 치는 이 저열한 언론판을 희망의 사회로 만들어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